

# 한국정치 이데올로기 정립

— 민주통일을 위한 사상정립 —





## 목 차

제 1 부 소련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천 .....	1
I.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그 구조 .....	3
II. 인민민주주의 국가론 .....	11
III. 스탈린후의 정치노선 .....	15
IV. 전인민적 국가이론 .....	27
V. 최근의 소련 이데올로기 .....	39
제 2 부 마르크스 레닌주의 비판 .....	55
I. 사회발전법칙의 의문 .....	58
II. 계급독재정당론 비판 .....	69
III. 공산주의전쟁론과 비판 .....	89
IV.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종말 .....	101
제 3 부 우리의 지표와 자세 .....	107
I. 후진국의 민주주의 문제 .....	109
II. 한국의 지표 .....	115



# 소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천



## I.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그 구조

### 1. 개념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우리 말화되었으나, 그 의미는 대단히 애매하다. 현대사회심리학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일정한 신념체제 또는 관념형태라고 이해되어 있다.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현실을 무시한 주의주장, 즉 공리공론이요. 둘째는 특히 계급적인 이해관계에 의거하는 주장이요. 셋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의식형태 속에 부지불식간의 이해관계의 침투를 받은 의식형태이다.

첫째의 의미와 둘째의 의미는 현실의 가능성을 무시한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둘째의 의미에서는 이해관계라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점이 중시되어 있다.

셋째의 의미에서는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주장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이해관계가 침투되어 마치 객관적 전체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되어 있다. 요컨대 이데올로기 문제에서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의식의 존재외제약성)라는 것이 중요시되어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데올로기라 함은 일정한 경제적 생산양식 위에 그 반영으로서 구축된 관념형태라고 한다. 거기서는 이데올로기라 함은 기본적으로 제급의식을 말한다. 제급은 그

계급에 소속되는 개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개인의 참다운 이해관계는 계급 이해로서 존재하므로 이데올로기와 심리는 상호 침투적이라 한다.

그리고 계급의식의 핵심은 그 계급이 사회 전체를 인식하고 사회 전체로 되는 것이므로 과학과 이데올로기도 상호 침투적이라 한다.

「카알·만하임」(Karl Mannheim, 1893 ~ 1947) 지식사회학에서 말하는 과학적 이데올로기는 편견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개인이 당파적 입장을 극복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얻은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이데올로기 입장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로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사유할 수 없고, 둘째로 인간의 사색에서 그러번 공상도 이미 인간이 맞본 경험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세째로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사유를 발전시키고, 네째로 새로운 경험 없이는 새로운 사유를 성립시킬 수 없다. 다섯째로 공통적인 사회생활의 경험 없이는 우리는 공통적인 사회의식을 가질 수 없고, 여섯째로 사유는 경험에 의해서 규정된다. 일곱째로 현실의 사회적존재의 공통성은 공통 경험의 기초이며, 사회적존재의 분열이다. 즉, 공통성의 모순은 당파적 이데올로기의 원천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정치사회의 응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다. 같은 이데올로기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회는 사회 결합이 극히 단단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목표 가치의 기본적 일치라 있기 때문에 지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설령 그곳에 이해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 일치가 있는 까닭에 사회적 유대(紐帶)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정치적 지배자는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가 목표를 이론화하여 지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신념체계를 발전시킨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런데 정당성을 배경으로 삼고 이루어지는 지배는 복종을 용이하게 하고, 물리적 강제력의 남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가 있는 지배는 꽤 쉽게 이루어진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체계의 윤희유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국가 사회를 통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공해 주며,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안정시켜 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모색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노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공산주의의 변질된 이데올로기를 앞에 놓고, 그들의 주장과 저의를 똑바로 인식하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열리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특히 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 2.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의 조건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정립함에 앞서서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의 조건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나라의 역사적 조건 사회적 조건 기타 구체적 조건을 도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첫째 간역체계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는 권력의 대상인 국민 대중에게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도 체계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 국민 대중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삽(難)한 것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지 모르나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물론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는 지식층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체계적이어야 한다.

### 둘째 대량전파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는 국민 대중 신앙이라는 형태로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엄격한 비전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 전하게 되고 지식층에게 교루 전달되어야 한다.

### 셋째 가치체계 구현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기호(嗜好)와 사회적 가치들 담아야 한다. 물론 지식층과 대중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 3. 이데올로기의 유형

이데올로기에는 체제이데올로기형과 반체제이데올로기형이 있다. 정치적 보수주의는 전자에 속하고, 정치적 비판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정치적 보수주의는 현상유지 (status quo)에 주안점이 있으며, 반체제이데올로기는 현상타파 (non status quo)에 주목적 이 있다.

체제이데올로기, 즉 지배이데올로기는 현체제를 옹호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 이데올로기는 여건 변동에 따르는 개량에 대해서 결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체제이데올로기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반체제이데올로기의 기능은 다르다. 반체제이데올로기의 첫째 기능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허위허식」을 폭로한다. 즉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현실성, 모순, 허위, 혼란, 비체계성 등을 지적하여 지배이데올로기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반체제이데올로기의 기능은 누적(累積)된 불만 불평 항의 등을 가지고 호소하는 소극적 효과를 노리는 데 있다.

반체제 이데올로기의 둘째 기능은 적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데 있다. 그것은 이상 「비전」을 제시한다. 이상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상 회장과 구별된다. 반체제이데올로기의 적극적 기능은 장차 실현하여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있다.

그 적극적 주장이 대중과 지식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된다.

#### 4. 이데올로기의 내용 구조

이데올로기의 구조는 초경험적 초현실적 부분과 합리적·경험적 과학적 부분과 비합리적·비현실적 부분의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데올로기의 첫째 구조는 초경험적 초현실적 부분이다. 이것은 이성적·합리적·과학적 논증을 넘는 부분이며, 이데올로기의 신화적·신앙적 측면이다.

이 측면을 믿고 받아 들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힘이 된다. 이 부분의 생사는 본리의 정당성 여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집단의 권력 관계는 따라서 좌우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의 인권신화나, 국민주권, 공산주의에서의 계급신화나 유물사권적 필연론신화, 또는 나치즘 파시즘에서의 국가상신화 민족신화나 지도자신화 같은 것은 바로 초경험적·초현실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신화적 부분은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며, 그 행동력의 원천이다.

이데올로기의 둘째 구조는 합리적 경험적 과학적 부분이다. 이 내용에는 보편타당적인 것과 역사적 사회적인 것이 있다. 물론 전자는 어떠한 역사적 단계에도 통용되는 보편 타당한 이론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자연과학적인 기술적 지식이다.

후자는 일정한 역사적 단계 또는 일정한 사회적 현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의 변화나 추리와 더불어 타당성을 잃어 버리는 운영에 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붕괴론, 대중중립화이론 같은 것은 현대공업국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 부분이라 하겠다.

이데올로기의 세계 구조는 비합리적·비현실적 부분이다. 이것은 환상 부분이다. 이 속에는 전설적 사고와 편견적 신념이 있다.

자유경제에서 주장하는 예정조화론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착취론, 또는 혁명론이나 미국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론 같은 전설적 사고에 속한다. 편견적 신념은 계급적 차이, 종교적 신앙 차이, 민족적 차이 등에 의하여 나오게 된다.

이 이데올로기 부분은 현실적인 사고를 부정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람은 논리에 의해서 산타기보다도 사랑과 미움, 공포와 분노, 불안, 우월감 등에 따라서 사는 가닭에, 일단 사람들에게 심어진 비합리적 부분, 비현실적 부분은 합리적 설명에 의해서 부정되어 버리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비합리적 부분대로 무비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 이 세가지 부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신화적 부분이 과학적 부분의 기초를 이루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과학적 부분이 신화적인 부분을 진리인 것처럼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적 사고가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화하는데 동원되기도 한다. 특정 영지에서 합리적인 것도 역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다.

신화적 부분과 비합리적 부분이 서로 보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세가지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거기서 이데올로기 전체로서의 「다이내리즘」( dynamism )이 생기게 된다.

요컨대 이데올로기가 집단적 가치 및 기호와 합치하며, 집단의 욕구를 반영한 이데올로기는 행동의 원천이다. 오늘날 기성종교의 세력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곳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그 대신 새로운 행동의 원천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새로운 신은 생산력이며, 그 구세주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후진국 민족주의에서는 국가가 신격화되고 군대가 구세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파시즘에서는 지도자와 민족을 역설하였다.

## Ⅱ . 인민민주주의국가론

### 1 . 신민주주의

신민주주의는 중국혁명의 제1단계, 즉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주요한 정치목표로 삼는 「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정치 「 이데올로기 」로서 모택동( 1893 ~ )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의 내용은 「 신민주주의론 」( 1940 )에 체계화되어 있다.

모택동은 중국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이 혁명은 세계 「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 「 프롤레타리아트 」에 의해서 지도되는 반제 반봉건의 민주민족혁명이다.

따라서 그 민주혁명단계에서도 「 부르조아지 」에 의하여 지도되어 온 낡은 범주의 민주주의혁명도 아니고, 진적으로 새로운 범주의 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 혁명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에 걸쳐서 체계화한 것이 신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신민주주의국가는 중국민족에 의한 완전 독립을 달성한 국가라고 한다. 그 국가는 독립, 민족, 평화, 평등의 국가라고 한다. 중국혁명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거기서 수립된 국가 형태도 특수한 형태를 가진다.

신민주주의국가는 「 부르조아 」독제의 자본주의적 공화국도 아니며 「 프롤레타리아 」독제의 사회주의적 공화국과도 다른 것이며,

혁명적 제제급에 기초를 두는 연합독제의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민주주의정권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기초를 두면서도 민족「부르조아지」를 포함한 광범위의 통일전선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신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사회주의의 전망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민주주의는 그 의미에서 과도적 성격을 띠는 특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면에서 볼 때 신민주주의 경제는 나라의 명맥을 좌우하는 대규모의 은행·공업·상업을 국유화하지만, 자본주의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대봉적인 토지소유제도를 일소하여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생산의 발전과 경제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를 반영하여 민족적·과학적 대중적인 반제반봉문화라는 것이다. 신민주주의의 내용은 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국가론에 있어서는 현실적 혁명정세의 전개에 따라 연합정부론에서 인민민주독제론으로 흘러 갔고, 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 2. 인민민주주의 국가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말에 가까운 무렵, 중앙유럽과 동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군이 패북하게 되자, 이에 호응해서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의 반파시즘의 민족통일전선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여기서 새로 수립된 여러 나라는 소위 인민민주주의국가라



불리게 되었다.

그 국가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나온 국가이론은 제삼국가형태론이었다. 이 이론에 의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나라는 제2차 대전 중 서구 자본주의 나라와 소련 사회주의 나라와 협력해서 파시즘 나찌즘과 싸웠던 관계로 이러한 동맹 관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타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후 등장한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평화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가망성을 전제로 해서 「마르크스」나 「레닌」도 전연 예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부르조아」독재국가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 형태의 국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민민주주의국가관은 전후 그 당시의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품고 있던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국가 이론을 전개한 인물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불가리아」(Bulgaria)의 「디미볼로프」(Georgie Mihailovitch Dimitov, 1882 ~ 1949)나 「코스토프」(Traicho Kostov), 「폴란드」(Poland)의 「고물카」(Wladyslaw Gomulka, 1905 ~ ), 「유고슬라비아」(Yugoslavia)의 「티토」(Josip Broz Tito, 1892 ~ ), 「루마니아」(Romania)의 「페토라시칸」(Petorasican), 소련의 「바르가」(Evgenii Evgenivich Varga, 1979 ~ )나 「툴라이닌」(I. P. Tulainin) 등이 그 대표자였다.

그러나 1947년 9월말 「코민포름」(Cominform)이라는 9개국 공산당 및 노동자당 정보국이 설립되었을 때, 「즈다노프」(A. A. Zhdanov, 1896 ~ 1948)는 인민민주주의국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라 함은 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삼는 근로 계급 블록 (блок)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 규정이 있는 이래 「제3 국가형태론」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즈다노프」는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방향을 취하는 국가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제3 국가형태론」에 의한다면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옮겨가는 것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폴란드」의 「비에루트」(Boleslaw Bierut)는 「고무르카」를 비판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이란 노동자계급을 핵심으로 삼고, 빈농 중농 그 밖의 근로 대중의 광범한 전선에 기초를 두는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데미틀로프」는 자아비판하여, 사회주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대항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절대 필요하므로 소비에트연방의 제도와 인민민주주의는 도시 농촌의 근로 인민이 동맹하여 이를 지도하는 노동자 계급의 지배 형태라고 보았다.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또 하나의 국가 형태라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프롤레타리아」독재 기능 수행의 나라로 규정했을 때, 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낸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러한 나라의 혁명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부르조아」혁명의 임무를 다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나라의 혁명을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고 짚라 말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둘째의 이론도 충분한 이론이 아니었다.

### Ⅲ. 스탈린후의 정치로선

#### 1. 스탈린사후의 정치전환

제 2 차대 전후 아시아 유럽에 걸쳐서 수많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등장되어, 세계 면적의 4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은 사회주의 진영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의 사상과 행동은 국제정치 및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휘둘르게 되었다. 다른 한편 식민지나 종속국에서는 민족 해방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독립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내에서의 국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내에서의 다원화 현상은 전후 세계를 크게 변모 시키게 되었다.

소련 방공산당 제 20 회대회 ( 1956 ) 는 스탈린사후 열린 최초의 당대회였다. 세계 경제의 변동에 따라 평화공존로선을 채택한 당의 정책은 확실히 스탈린로선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대회에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빨리 완료하여 가까운 장래에 공산주의 사회건설로 들어간다고 하는 새로운 국내정치 목표를 내세웠다.

그 대회의 보고자 「 흐루시초프 」 ( Nikita S. Khrushchev, 1894 ~ ) 는 그 당시 아직도 리이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 몰로토프 」 ( V. M. Molotov, 1880 ~ ) 「 말렌코프 」 ( G. M. Malenkov, 1901 ~ ) 등의 소위 반당그룹 결성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련적인 좌천정책 내지 숙청정책을 단행하여

당간부의 인적구성을 개편함으로써 「호르시초프」는 리이너쉽을 확립하게 되었다.

소련 방공산당 제 21 회 대회 ( 1959 ) 제 22 회 대회 ( 1961 ) 에서의 「호르시초프」보고는 제 20 회 대회에서 제시한 로선을 너 상세히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동안 1957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 12 개국 노동자 및 공산당 대표자회의가 열렸고, 1960년에는 세계 81 개국의 노동당 및 공산당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제 21 회 대회에서는 제 20 회 대회에서 채택한 외교기본로선을 답습하는 동시에 소련 정치목표를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두었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합법측면 이행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국가사멸과정을 전망했다.

제 22 회 대회에서는 제 21 회 대회 이후 소비에트국가는 벌써 사멸과정에 있는 국가, 즉 전인민적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이와 같이 신지도자들이 국제 국내 정치로선에 있어서 스탈린 로선에 도전하게 되자 국제공산주의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중소이념분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

## 2. 중소이념분쟁

제 20 회 당대회 ( 1956.2 ) 소련 신정치로선, 1957년 모스크바

선언, 제 21 회 당대회 ( 1959.1 ), 1960 년 모스크바성명, 제 22 회 당대회 ( 1961.10.17 ~ 31 ) 신강령 채택 등에 대하여 중공측에서는 소련을 수정주의로선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공측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로선에 관한 제안」(1963.6) 등 99 편을 통하여 소련의 신로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련 공산당은 「소련의 전당조직과 전공산당원에게 보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개장」 ( 1963.7 ) 등 5 편을 통하여 중공비판을 반박했다.

「호르시초프」는 스탈린각하, 평화공존정책, 전쟁불가피론의 부정 사회주의에의 평화이행론 등을 력설했다. ( 주 1 )

#### (1) 평화공존

세계가 두 개의 체제로 나누어져있는 국제상황 아래서는 이질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 사이의 평화공존이나 어느 하나의 길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유일한 원칙은 사회주의국과 자본주의국과의 평화공존 및 경제경투이라고 하는 「레닌원칙」이다. 이것은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적 기초로 되어 있다.

평화공존 원칙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냉전의 일소, 군사블럭의 해소, 군사기지의 철폐, 국제관리를 수반하는 완전 전면 군축, 대화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제국가의 평등, 제국가의 영토보전, 독립과 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제국민간의 무역 문화 과학 교류의 증진 등을 실현하려고 한다.

평화조건하에 두 가지 체제가 서로 경제 경쟁을 해간다면, 결국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승리는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내정에 무력간섭함으로써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비교해서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조만간 그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련의 주장에 대해 「흐르시초프」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덧붙이고 있다. 평화공존정책은 여러 나라사이의 평화 조건 아래서 평화의 적에 대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중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로선이다.

이 조건 아래서는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내부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이나, 식민지 종속국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이 전개하기에는 유리하게 되며 또 이러한 운동이 확대됨으로써 평화공존이 강화된다.

이와 같이 여러 국민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싸움으로써 제국주의의 입장이 일층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질적인 사회제도를 가지는 여러 나라 사이의 평화공존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이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상과 같은 소련측 주장에 대하여 중공측은 평화공존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레닌의 평화공존정책의 기본사상에 의한다면, 첫째로 소비에트국  
국가가 제국주의국가와 평화공존할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국가  
와 몇번이나 실력비교를 한 결과 우세할 때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는 제국주의 국가의 소원에 근본적으로 배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는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평화공존이란 프롤레타리아가 색다른  
사회제도를 나라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면에서 내세우는 정책이  
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의 전내용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레닌의 평화공존정책의 기호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2차 대전 후 국제적인 계급세력 관계에는 근본적인  
인 변화가 생겼다.

즉,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어 민족 해방 운동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수 많은 민족주의 국가가 독립되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평화공존정책을 실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제  
공되었다.

레닌주의에 의거하여 중공이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방침은 다음  
과 같다.

- ①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상호원  
조원칙을 견지할 것.

② 민족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설령 이러한 나라들이 사회주의 제도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민족 독립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와 공통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삼아 이러한 나라와 평화공존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할것.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공존정책에 대한 중공측 견해와 소련측 견해는 배치되어 있다.

첫째로,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투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화공존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립 투쟁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에트 지도부는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의 근본적인 대립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과의 근본적인 모순을 말살하고, 국제적인 계급투쟁을 말살하여 두 개의 제도 두개의 진영 사이의 평화공존을 전면적인 협력에까지 내밀고 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투쟁은 평화공존정책과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둘째로,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사회주의 국가 상호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하에서 우호상호원조 관계를 유지한다. ② 사회제도가 색다른 나라 사이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반대하면서 평화5원칙 - (①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



중 ② 상호불가침 ③ 상호내정불간섭 ④ 평등호혜 ⑤ 평화공존) 의 기초 위에 평화공존정책을 실행한다. ③ 피압박 인민족에 대해서는 그 혁명 투쟁을 지원한다.

세째로, 평화공존이라 함은 사회제도가 색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 독립한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압박 민족은 제국주의와 평화공존할 수 없다. 이러한 중공 측 견해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 전쟁정책을 폭로하게 되므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인민과 여러 나라를 단결시킨다고 강변한다. 중공은 소련을 소주사회제국주의라 하고 미국을 미자본 제국주의라 비판한다.

## (2) 전쟁불가피론의 부정

제국주의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명제가 있다. 이 명제는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의 소산이다. 즉, 이 명제는 전쟁에 대해 이익을 느끼지 않는 사회세력과 정치세력이 약하고 제국주의에 대하여 전쟁을 포기시킬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명제는 그 시기에 있어서 옳았다.

그러나 현재는 그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므로 이 명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을 일으킬 경제적 기초도 존속한다는 레닌주의의 명제는 오늘도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경계를 게으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경제현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즉, 전쟁은 제국 세력의 상호관계, 정치 세력의 상호관계, 국민 대중조직과 그 의식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진보적인 사회 정치 세력의 투쟁이 결정적인 구실을 다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나라, 세계 노동자 계급의 조직, 민족 해방 운동,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 및 그 밖의 평화애호세력은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세력으로 되어 있다. 비록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제국주의자들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전쟁의 숙명적인 불가피성은 벌써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에 대하여 중공측은 무어라고 비판했는가? 소련측 견해로는 핵무기가 나타난 후 제국 투쟁의 법칙은 전적으로 변모해 버렸다고 한다. 즉, 핵무기 이후 피압박인민과 피압박민족은 혁명을 포기 하고 인민혁명전쟁과 민족해방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피멸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여전히 현대전쟁의 근원이며 제국주의 진영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착취제도가 있는 한 전쟁은 불가피적이다. 현대의 침략과 전쟁의 주요 원천적 힘은 미국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제국주의에 대한 그 핵우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제국주의 국가가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평화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

전쟁 불가피론을 주장한 중공은 1964년 10월 16일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5년 5월만에 1970년 4월 24일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

### (3) 사회주의에의 평화적 이행문제

세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회주의 이행 형태에도 새로운 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행형태에는 소비에트 형태와 더불어 인민민주주의 형태가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점점 다양화될 것이다.

몇몇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부르조아 독재 전복 및 계급 투쟁의 격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그러한 곳에서 혁명적 이행이 필요하겠으나, 모든 조건 아래서 국내전이 수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폭력 혁명과 국내전이 사회 변혁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오늘날 벌써 사실과 맞지 않는다.

모스크바선언과 모스크바성명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과 그 전위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당은 평화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과 전인민의 이익에 합치하며 민족전체의 이익에도 합치한다.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수많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전위당에 의하여 인도되어 있는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통일전선 및 인민전선, 여러 정당이나 대중 단체의 온갖 형태의 협정이나 정치적 협력을 기초로 해서 인민의 다수를 통일하여 내전 없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인민의 손으로 옮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 다수에 의지하여 자본가나 지주와의 타협정책을 버릴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노동자계급은 반동적 반인민적 세력을 패배시켜, 의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획득하게 되며, 부르조아에게 봉사하는 도구인 의회를 근로 인민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바꾸어 의회 밖에서 넓은 대중 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반동세력의 저항을 분쇄하여 사회주의혁명을 평화리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거대한 독점자본과 반동세력에 반대하여 심각한 사회개혁을 위하여 그리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는 노동자 농민대중 도시 중간층의 계급투쟁의 넓고도 꾸준한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착취계급이 인민에 대하여 폭력에 호소해 올 때에는 별개의 가능성, 즉, 사회주의에의 비평화적 이행 가능성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아니 된다. 레닌주의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또 역사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배계급은 자진해서 권

력을 양도하지 않는다 .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계급투쟁의 격렬성의 정도와 형태는 프롤레타리아트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오히려 인민의 압도적 다수의 의사에 대한 반동세력의 저항력 ,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우는 어떤 단계에서 반동세력이 폭력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 각 국가에서 사회주의에의 이행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 1 ( 주 2 )

#### (4) 스탈린 각하

제 20 회 당대회는 중앙위원회가 제 19 회대회 이래 레닌의 집단지도원칙의 부활과 당생활 기준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행한 활동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이것은 당조직의 활동능력과 당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향상을 촉진했다 .

당은 역사에 있어서의 개인의 구실에 대한 마르크스 . 레닌주의적 이해를 널리 설명하고 스탈린의 개인승배를 비판하였다 . 개인 승배란 것은 개인의 구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대중의 구실을 낮추게 하는 것이며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의 활동에 관하여 두 가지면을 보고 있다 . 즉 그것은 당이 평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당이 비판하고 비판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 ( 주 3 )

이상과 같은 스탈린 각하에 대한 것은 1인 숭배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스탈린의 비인간적 비인도적 성격은 무자비한 탄압을 감행했으며, 1인 숭배를 고취하는 나머지 스탈린 자신을 역사학·철학·경제학·문학·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최고 지도자라고 자가 자찬했으며, 비밀 경찰을 중핵으로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숙청을 감행했다.

그러나 중공은 소련의 스탈린 부정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스탈린의 부정은 스탈린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발전시킨 것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스탈린의 행적에도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오류는 스탈린의 공적에 비해 본다면 제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공은 소련을 비판했다. 중공측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하여 그 두 가지의 임무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모든 착취계급을 일소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켜, 「각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받는다」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건을 정비한다는 것.

둘째 국제적으로는 각국 인민이 제국주의 자본주의 착취제도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고 세계혁명을 지원한다는 것.

## IV. 전인민적국가이론

### 1.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와 전인민적 국가

제 22 회 당대회에서는 소비에트국가를 전인민적 국가 (Vsenarodnoe Gosudarstvo) 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속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와 전인민적 국가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단계로서 이 두 가지의 국가를 구별하는 이론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것은 스탈린의 소비에트국가 발전론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스탈린은 소련에 사회주의가 확립된 이후 제 18 회 당대회 (1939) 에 있어서 10 월혁명 이후 19 6 년 헌법 채택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에트 국가 발전을 두 단계로 나누었던 것이다. 즉, 제 1 단계는 10 월혁명 이래 착취계급이 일소된 때까지의 시기이며, 제 2 단계는 도시 및 농촌에서 자본주의 분자가 일소된 시기 이후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완전히 승리하여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게 된 때까지의 시기이다. (주 4)

즉, 스탈린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의 이행기와 사회주의의 확립기라는 두 가지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 두 시기를 지배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었다. 이러한 발전단계론은 스탈린시대의 소비에트 시대구분이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제 21 회 당대회는 공산주의에의 점차적 이행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사회의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기 때문

에 소련 사회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게 되었다.

제 1 단계 = 제 2 차 5 개년 계획 ( 1933 ~ 37 ) 이 수행되어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가 끝난 단계

제 2 단계 = 사회주의 승리의 시기에서 비롯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로의 이행 ( 移行 ) 을 준비한 단계

제 3 단계 = 1959 년 제 21 회 당대회 이후 공산주의 건설이 전개하는 단계

이와 같이 소비에트 국가에 세 단계를 덧붙였으나 소비에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 21 회 당대회 이후에 있어서도 스탈린시대의 견해가 그대로 답습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22 회 ( 1961. 10 ) 당대회에서의 「호르시초프」보고와 동대회에서 채택된 당강령 ( Programma Kommunisticheskoi Partii Sovetskogo Soyuza ) 이 소비에트 국가를 전인민적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스탈린식 견해가 대폭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호르시초프」의 보고에 의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 레닌에 의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일시기가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국가이지만,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벌써 사회주의는 완전히 그리고 최후적으로 승리하여 공산주의의 전면적 건설기에 들어섰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요로 했던 여러가지 조건이 없어지고 그



국내적 과제가 수행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에서 전인민적 국가로 성장 전환했다. 이 전인민적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이며, 사회주의 국가조직이 공산주의적 사회 자치에의 성장 전환과정에 있어서의 극히 중요한 도표이다.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의 이행기 전체가 사회주의 사회이며 이 시기의 사회에 해당되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의 과도기의 국가라는 종래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게 되었다.

제 1 단계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옮겨가는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과제를 해결한다.

제 2 단계는 사회주의의 건설이 확립하고 완료한 시기의 사회에 해당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와 전인민적 국가라는 양면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완성하여 공산주의 건설의 전개기에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한다.

제 3 단계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옮겨가는 전행기의 사회에 해당된다. 이것은 종래의 국가의 특징과 미래의 공산주의적 사회 자치가 혼합되면서 점차 국가의 정치적 성격을 상실해 가는 전인민적 국가이며,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상 「호르시초프」의 보고에 의해서 호르시초프체제 확립 이

후의 소비에트 국가와 스탈린 시대의 그것을 대비해 보았다.

그러면 계급적 억압이 필요 없게 된 전인민적 국가에서 왜 국가가 필요한가? 이 점에 관해서 「호르시초프」의 보고는 대략 다음과 같다.

『국가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인 계급 적대가 없어졌는데 왜 국가 자체는 남아있는가? 그것은 국가의 도움을 빌려서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 5)

그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그는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에트 사회를 지키는 과제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 발전의 국내적 조건을 정비하는 과제가 있다. 즉 경제적 문화적 건설의 지도, 노동과 소비의 양의 통제, 소비에트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보, 사회주의적 질서와 재산의 유지라는 소비에트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 강제가 아직 남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호르시초프는 현 단계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 2. 신강령

스탈린은 첫째로 일국사회주의 건설에 중점을 지나치게 두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 이론을 경시하였다. 둘째로 스탈린 시대에는 스탈린에 대한 개인 우상숭배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전후 소비에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공산당 책임자에 대한 우상숭배가 성행되었던 것이다. 거기서는 소스탈린주의가 강

조 되었던 것이다. 북파의 김일성도 그 예외가 아니다. 세계로 스탈린시대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당으로 자처하던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스탈린 시대에는 각 방면에 걸쳐서 비판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어 왔고 당 관료주의의 폐단도 대단했다.

그러면 소비에트 국가에서 왜 그와 같은 스탈린주의의 병리가 일어났던가? 스탈린주의의 병리는 스탈린 개인의 「인간악」에 원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산당의 「조직악」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즉 소비에트 공산당은 자본주의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병리는 소비에트 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기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1961년 10월 소련 공산당은 세 번째의 강령인 신강령을 채택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제 22회 대회에서 1000만명의 당원을 대표하여 소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령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당소사에 의한다면 신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소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더불어 공산주의에의 이행문제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의 사회 경제형태의 두 가지 단계이다. 이 두 가지는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다는 것, 사회 구성원의 점점 늘어나는 수요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을 추진한다

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단계는 생산력의 발달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관계의 성숙도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방법과 인간들의 의식 정도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산주의는 인간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의 최고 단계이다. 사회주의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단계에 자본주의에서 직접 이행할 수 없다. 공산주의에의 이행은 사회주의 건설 후에 시작한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성장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역사과정이다.』(주 6)

그와 더불어 소련 공산당 강령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문서에 완전히 맞추어서 세계 발전의 현단계와, 평화, 민족독립,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모든 나라의 근로자가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신강령은 공산주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산주의라 함은 지상에 평화, 근로, 자유, 평화, 우애, 행복을 확립하는 사회를 말한다』라고 자가자찬하고 있다. (주 7)

이 신강령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공산주의라 함은 생산수단이 단일 전인민적 소유로 되어 있고, 사회의 전성원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평등이 되어 있는 계급 없는 사회제도이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력도 발전한다. 사회적 부의 모든 원천은 넘쳐 흐르는 흐름으로 되어 흘러내리며, 「각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각 사람에게는 그 요구에 따라서 받는다」고 하는 위대한 원칙이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

유로운 자각된 근로자의 고도로 조직된 사회이며, 그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치가 확립되어 사회의 행복을 위한 노동이 전원에 있어서 생활의 첫째 요구, 자각된 필연성으로 되고 각 사람의 능력은 인민을 위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도록 이용될 것이다.』

(주 8)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것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전제조건을 성숙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과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지적했다.

①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의 창설 ② 공산주의적 사회관계의 발전 ③ 새로운 인간의 육성. (주 9)

이러한 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불가분의 전일체이다.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강령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1년 - 70년 10년 동안 소련은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구축하고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이다. 1971년 - 80년 10년 동안 소련은 전인민에게 충분한 물질적 재화와 문화재물을 보장할 예정이다. 즉, 이 단계는 욕망에 따르는 분배원칙이 실현되는 직전에 이르게 될 것이며 단일 전인민적 소유로 점점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의 신강령은 극도로 낙천적인

장래에 대한 전망을 내리고 있다. 그 강령은 공산당「이데올로기」의 무오류성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본체계간의 평화공존은 있을 수 있어도 「이데올로기」사이의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종전과 다름 없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신강령에서는 새로운 인간의 육성을 과제로 삼아 인간 개조를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건설은 인민의 노동과 에너지와 지혜에 의거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의식이 고도로 되면 될수록 인민의 창조적 적극성은 한결 충분히, 한결 광범하게 되어 공산주의 건설의 성공도 커지게 된다.

당은 정신적 풍부성과 도덕적 순결성과 전전한 신체를 한 몸으로 조화시킨 새로운 인간의 육성을 자기 과제로 삼았다. 미성년 세대의 교육에는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새로운 인간상의 형성은 공산주의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속에서 당과 국가와 사회단체의 모든 육성 활동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다.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나 부르조아 도덕의 표현과의 투쟁 미신이나 편견의 잔재와의 투쟁에 관하여 당은 이것을 공산주의 교육 활동의 일구성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인도적 이데올로기다. 그 이상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 민족 사이에 참다운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으며, 인류의 파멸적 세계전쟁에서 해방하여 지상에 전반적인 평화와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즐거운 생활을 확립하는

데 있다.』라고 당사에서 지적했다. (주 10)

이것은 유물론자들의 이론으로서는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라 하겠다.

『소련 공산당의 공산주의 건설자 도덕규범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어 있다.

- ① 공산주의의 대업에 대한 헌신.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대한 사랑.
- ② 사회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 노동.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 ③ 사회적 재산의 보전과 증가에 관하여 각자가 배려할 것.
- ④ 사회적 업무에 대한 고도의 자각.  
사회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비관용.
- ⑤ 집단주의와 동지적 상호 원조.  
각 사람은 전원을 위하여, 전원은 각 사람을 위하여.
- ⑥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와 상호 존경.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벗이며 동지이며 형제이다라는 것.
- ⑦ 성실과 정의. 도덕적 청결성,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 있어서의 솔직성과 겸허성.
- ⑧ 가문내에서의 상호존경. 자제 교육에 대한 배려.
- ⑨ 불공정, 나태, 불성실, 출세주의, 탐욕에 대한 비타협.
- ⑩ 소련 전체 민족의 우의와 우애.  
민족적 인종적 반목에 대한 비관용.
- ⑪ 공산주의, 평화, 민족 자유의 적에 대한 비타협.

⑫ 모든 나라의 근로자, 모든 인민과의 형제적 연대.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육노동에도 종사할 수 있고, 지능노동에도 종사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생활 과학 문화 예술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능력 있는 자각된 교양 높은 사람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주 1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평가되어 있는 도덕규범을 멋대로 도용하고 있으며, 유물론의 논저도 무시하면서까지 인간개조를 역설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아이로니컬」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 3. 전인민적 국가의 사멸과정

신강령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의 주요한 방향이 규정되었고 국가사멸론에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졌다.

즉, 첫째로, 착취 계급이 근절됨으로 인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이 소멸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주요한 기능인 경제적·조직적 기능과 문화적·교육적 기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주의 국가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들어간다. 이 국가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남을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전개 개선한다는 것, 국가의 통치 경제건설 및 문화건설의 지도에 전시민이 활발하게 참가한다는 것, 국가기관의 활동을 개선하여 그 활동에 대한 인민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공산주의 건설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국가조직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는 것이



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을 밝힌 신강령은 국가사멸에의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였다. ① 소비에트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회  
박하게 하여 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을 밝히도록 그 구성 권한 활  
동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단체의 구성 권한 활동을 강화할 것.  
② 국가기관의 직원을 감원하여 그 활동을 개선할 것.  
③ 입법 활동에 인민의 광범한 참가를 도입할 것. ④ 사법기  
관의 민주적 기초를 확대할 것. ⑤ 지역의 통일적 관리를 위  
하여 단일 민주적 기관을 창설할 것.

「호르시초프」에 의한다면, 국가사멸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첫째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는 내적 조건과,  
둘째로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확립과 그 승리라는 외  
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국가사멸의 과정은 두 가지 측면의 통일이라고 이해  
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일부의 국가기관과 기능이 그 정치  
적 성격을 잃어버리면서 발전강화하여, 공산주의 아래서도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어 가면서 본래 국가적이 아닌 특징의 면이 더욱  
더 확대 발전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기관과 기능이 자기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그 본래 국가적인 특징이 공산주의 사회에  
서는 전적으로 모습을 잃어 버리게 된다. 국가사멸의 과정은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의 통일이다.

국가가 정치적 특징을 잃어 버리게 되어 비정치적인 공산주의  
적 자치조직으로 진화한다는 과정과, 국가적 법적 강제를 집행하

는 기관이나 장치가 최종적으로 공산사회에서 사멸한다는 과정의 종합이 바로 국가 사멸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공은 소련의 전인민적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중공측은 현재의 소련에도 아직 적대적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새로운 부르조아분자와 낡은 부르조아분자, 새로운 부농과 낡은 부농, 그 밖의 잣가지의 타락 변질분자이다. 소련의 전인민적 소유제 기업 속에서 수많은 부르조아분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물자공급부문, 상업부문 그 밖의 조직의 근무자들과 결탁하고 있으며, 보안 사법기관 속에서도 그들의 보호자나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고급간부의 보호까지도 받고 있다. 이러한 타락분자들은 일부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부르조아분자들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 적대하는 계급이다. 집단농장(Kolkhoz)에는 각종 작식의 부농분자가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집단농장 이외에도 개인적 기업 경영자, 중매인, 상업 투기자들의 부르조아분자 조아분자들이 많이 있다. 소련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공업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영역에서 유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말단 기관에서 고급지도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프롤레타리아트에 적대하는 부르조아지의 활동이 엿보인다. 이러한 반사회주의적인 활동이야말로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계급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새로운 부르조아분자는 증가되어 당 정부 경제부문 문

화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특권 계층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특권 계층은 수정주의 집단의 주요한 사회적 기초이다. 이것은 계급적 모순이다.

## V. 최근의 소련 이데올로기

### 1. 공산당사의 개정

1930년대의 당사는 공산주의자들의 성진과도 같았다. 모든 당원에게는 물론이러니와 심지어 대학에서까지 정규과목으로 넣어 대학생들에게 당의 정통성을 주입시켜 왔던 것이다. 거기서는 스탈린에 대한 개인우상숭배가 노골적으로 실려 있었다.

그런데 스탈린 감수 「전연방공산당」 불서기키소사는 1959년 개정되어 스탈린 개인숭배가 비판되었다. 이것은 스탈린사후 적화운동과 발맞추어서 고친 것이다. 그 뒤 1962년 간행 제2판에는 당시의 집권자 「호르시초프」의 발언과 그 업적이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다. 그러나 「호르시초프」 실각후 오늘의 입장을 천명하기 위하여 소련공산당사는 1969년 11월 세번째 개정을 보게 되었다. 이 개정판의 특색을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독재자 개인의 감수가 아니라, 공동집권자의 명단이 밝혀져

있다는 점. 「포노마리요프·베·엔」 아카데미회원(감수), 「민츠·이·이」 아카데미회관, 「브가에프·에·이」 역사학석사, 「월린·엠·에스」 역사학박사, 「자이체프·웨·에스」 역사학박사, 「쿠치킨·아·페」 역사학박사, 「로마아킨·엔·아」 등 7인이 공동 집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2) 「호르시초프」당제일서기를 격하하였다는 점. 1962년 제2판에 실려 있던 「호르시초프」 발언의 인용과 그의 업적을 모조리 삭제해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호르시초프」의 농업문제 실패도 비판 받았다.

(3) 스탈린을 재평가하였다는 점. 물론 스탈린이 개인숭배정책을 강요했다는 점과 제2차 대전 돌발에 대하여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수행에 대한 스탈린의 공로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4) 1969년 6월 국제공산당 노동자당 대표자회의에 대한 자가자찬이 실려 있다는 점.

## 2. 혁명 52주년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 외교의 본질적 기초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소련의 대외정책은 국내의 중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있다. 1969년 10월-11월 중소 국경회담의 개시, 1969년 11월 미국과의 전략군비규제 교섭 등이 있었다. 소련은 미소 양대세력의 견제가 없는 한 중공이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군

측에서 합의의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소련의 전유럽안보 회의의 구상도 저의에 국내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다.

1970년 4월 20일 「레닌」 정생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국내경제문제와 이데올로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경제문제에 관해서 본다면, 일반 민중에게는 소비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966 - 70년 형행 5개년 계획은 소비물자 증산에 역점을 두어 왔다. 특히 1968년 69년은 소련공업사상 처음으로 소비물자의 생산 성장율이 생산재의 그것을 능가했다. 공업 전체의 성장율은 1967년의 10%를 「피이크」로 해서 하향일로에 있다. 그 대책으로서 소련은 첫째 기술혁신, 둘째 당조직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셋째 불필요한 관리직(管理職)의 정리, 넷째 경영유지비의 절약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출 억제를 꾀하고 있다. 소련 「프라우다」지는 「질이 수반되지 않은 양은 시민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물자의 낮은 질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소련은 전후 20여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도 전시경제체제에 묶여 있다. 게다가 돈이 있어도 살만한 물건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하여 본다면, 아직도 소련 시민의 마음속에는 상능박래품의 관념이 남아 있고, 서구의 양식취미, 사회체제, 사고방식이 깊숙히 스며들고 있다. 「서구가 소련보다 앞서 있다는 관념」은 소련 지도자에게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체제에 대한 고발과 배전이 늘어나기 시

작하고 있다. 원자물리학자「사하로프」( Sakharov ) 박사 등의 「지적 자유」의 요구, 자유주의적 「인텔리」들의 유엔에 대한 인권회복의 호소, 「쿠즈네초프」( Kuznetsov )의 영국 망명 등은 그 단적 표현이었다.

이러한 국내사정에 비추어 소련 지도자들은 지난 1970년 4월 20일을 계기로 해서 「이데올로기」의 정통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텔리」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중하게 하였다. 소련 지도자들도 사회주의 성패도 국내 생활이 어느 정도 매력적이나 또는 매력적이지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소련의 군사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전면적 핵전쟁의 회피
- ② 소련의 전략적 핵군사력은 그것이 공격용이건 방어용이건 간에 핵전쟁의 억제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 ③ 동구 권익을 옹호하고 중공세력과 대항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대륙위주의 군사적 위치를 굳게 지킨다는 것.
- ④ 소련은 장래 있을 전세계전을 위하여 해군 해병대를 포함한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

그러면 70년대 소련의 세계전략은 어데다 두고 있는가? 이것은 추측하기 어려운 문제라 하겠으나, 감히 추정해 본다면, 첫째로 미국의 대외전략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대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로 「브레즈네프」 독트린 ( Brezhnev Doctrine )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동구 위성국에 대해서는 한정주권을 주장할 것이므로, 동구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받

회할 것이다. 소련은 탈출구를 마련할 「코오너」에 숨어서 위장전략을 쓸지도 모른다.

세째로, 대중동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네째로, 대중공정책에 있어서 유엔가입에 적극 찬동을 보이면서도 결국 중공봉쇄정책을 계속 펴야할 것이다. 소련은 인도 파키스탄의 중립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중공전체를 노릴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소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밖의 문제는 무엇인가?

- ① 서독의 핵무기 소유 문제
- ② EEC의 중요성과 유럽의 변명이 소련 경제에 미칠 영향
- ③ 미국이 서구문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서독정부의 동방정책(Ostpolitik)에 강력히 반대하던 소련은 독소불가침조약체결로 대독 우호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1969년 6월 75개국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한 기본문서에서는 미소관계가 예언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미정책은 펴 유동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크레믈린」(Kremlin) 통치자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다.

첫째로, 반항자 학생 문제이다. 즉, 능동적인 반항자들의 대부분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는 대학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반항자 단결 문제이다. 즉, 넓고 넓은 소련 영토내에

서 각계 각층의 반항자들은 전례 없이 단결이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째로 반항자 침투 문제이다. 즉, 능동적인 반항자들과 크레믈린의 정책에 회의를 품고 있는 자들이 이미 비밀경찰(KGB) 내무성(MVD) 및 당 핵심기구에 침투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네째로 전직 수상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몰로토프(Molotov) 말렌코프(Malenkov), 불가아닌(Bulganin) 흐르시초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러한 크레믈린 통치자들의 고민이 있는 가운데 정치국 안의 일부 「그룹」, 특히 「셀레핀」(Aleksandr N. Shelepin, 1918 ~ ) 등 강경로선의 배전과는 소련경제의 취약성과 농공분야에서의 실패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래서 1970년 3월 4월에는 소련 내분 격화의 보도가 있었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까지 알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 6월 14일 실시한 총선거후, 7월 15일 소련 최고회의는 코시긴수상과 포도고르니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을 재신임하고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를 최고회의간부회원으로 유임시킴으로써 브레즈네프, 코시긴, 포도고르니로 묶인 크레믈린의 3두체제는 우성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치국원 11명 중 8명이 70세 이상이라는 점은 소장세력의 배전을 받을 가망이 많다.



### 3. 국제공산당회의

호르시초프 실각(1964) 이후 크리물린의 끈질기게 추진해 온 국제공산당회의는 1965년 모스크바에서 있던 예비회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소이념분쟁으로 공산권의 단합이 결정적인 과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68년 2월 「부다페스트」(헝거리)에서 67개당의 대표가 출석하여 예비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1968년 8월에 절정에 다다른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과 이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 등으로 또다시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까스로 1969년 6월에야 모스크바에서 9년만에 다시 국제공산당 노동자당 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 회의에는 75개 당대표단이 참가했다. 이 대회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회의가 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은 평화와 자유와 민족독립의 주요 적인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재문제 및 공산주의 운동 대열의 통일문제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모든 공산당과 노동자당의 대표가 발언했다. 그러한 발언에는 제국주의의 침략행위 - 먼저 월맹과 아라브 국민에 대한 행위 - 를 저지하기 위한 반제세력의 통일의 강화와 평화의 강화, 신세계대전 방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재원축에 의거하는 공산주의 운동 대열의 결집을 소망하는 기분이 넘쳐 있었다』고 하였다. (주 12)

「소련 공산당 대표단은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수정주의, 우익기회주의, 좌익기회주의, 민족주의의 포권파의 투쟁에 관한 문제를 원칙적으로 제기했다. 소련 공산당은 중공 지도자들의 반레닌주의 분열주의적 반소행동에 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며, 또 소련 국민의 이익의 옹호와 소련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소련 공산당은 종전 주장과 같이 「자본주의국에 있어서의 반제운동의 주요세력은 노동자 계급이다. 그 혁명적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하는 농민 지식인 청년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이 세계 공산당대회의 세계 근로자들에 대한 호소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제국의 국민, 자본제국의 프롤레타리아, 전민주주의세력 해방을 획득한 인민, 억압하에 있는 인민은 제국주의 반대, 평화 민족독립, 사회진보,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목표로 삼는 공동 투쟁에 결집하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발언은 어떤가.

이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는 「루마니아의 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6월 6일 중소이념분쟁 문제로 논전을 벌였다. 당초 대회의 준비회의에서는 중공문제와 체코 문제는 기본 문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양해되었으나 적어도 4개국 공산당의 대표자들이 중공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세계제국주의의 일부이며, 그 문제는 덮어둘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공에 대한 공격은 「파라과이」 공산당수 「카를로스 마시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중공을 온건한 어조로 비난하자,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초세스쿠」( Nicolae Ceausescu , 1918 ~ )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여, 참석을 했든 안했든 다른 당을 비난하는 것은 삼가라고 다른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호세스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공산당수 「왈데크 로세」( Waldeck Rochet , 1905 ~ )와 「폴란드」 공산당수 「올라디슬라브 고물카」( Wladyslaw Gomulka, 1905 ~ )는 세계 공산당 운동의 「제1의 적」은 민족주의라고 중공을 다시 비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공산당수 D. 「아론」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한편 중공의 북평방송은 같은 6일 처음으로 세계 공산당대회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고, 이 대회는 「모스크바」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라고 또다시 주장하려는 반중공 반알바니아 반마르크스 레닌 주의적 수정주의전선집회라고 비난했다.

#### 4. 스탈린 재평가(브레즈네프로선)

1969년 12월 21일 스탈린 정생 90주년의 기념일에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스탈린 평가의 논문은 월정권의 「딜렘머」에 대한 탈출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소련 지도자들이 스탈린의 긍정적 재평가를 내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스탈린의 긍정적 평가에 의하여 소련 동구 여러 나라의 이베올로기 통제와 정치체제의 강화를 노리고 있다.

둘째로, 스탈린이 이미 범했던 레닌적 집단지도원칙의 일탈과 그 밖의 오류를 분명히 지적함으로써 과대평가를 피한다는 균형이 잡힌 재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로, 그것은 소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발효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통제가 오늘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자유 「인텔리」의 저항은 언제나 위정자에게는 커다란 문제였다. 스탈린 격하의 결과 중앙집권적 통제의 약화에 따르는 말단기업의 권한 증대, 사회 저변의 민주화 내지 자유화의 경향이 하나의 위험신호였다. 여기에 중도를 취하는 스탈린 재평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프라우다」지의 편집국논문의 요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스탈린의 공적과 과오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먼저 공을 본다면, 스탈린이 당중앙위원회 서기장이었던 세월에 ① 조국의 사회주의적 개조 ② 공업화의 촉진 ③ 농업의 집단화 ④ 문화의 고장이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기록하였다. 특히 스탈린 지도하에 어려운 거대한 과제를 수행했다.

둘째로, 위대한 이론가 조직자로서의 스탈린은 다른 당지도자들과 더불어 「트릭키스트」 우익 기회주의자,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와의 투쟁을 지도하여, 그 이론적 노작과 실천적 활동에 의하여 레닌주의의 적과의 사상 투쟁 및 정치투쟁에 중요한 공헌을 행하였다.

셋째로, 그러나 스탈린은 이론적 과오와 정치적 과오를 범했

다. 이것은 만년에 중대한 과오가 되어 개인 숭배와 결부된 과오와 의곡은 공산주의 건설 사업에 오히려 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오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 소련 공산당의 이론, 정치의 본질을 변질시키지는 않았으며, 또 변질시킬 수도 없었다.

그러면 「스탈린」재평가에 대한 「브레즈네프」로선에 정치적 평가는 어떠한가?

① 스탈린재평가는 의견대립의 최대공약수에 발표하여 「브레즈네프」로선을 천명한 것이다. 이 스탈린의 긍정적 평가에 의하여 첫째 소련과 동구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고, 둘째 정치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셋째 모택동로선과 일선을 그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스탈린에 대한 지나친 평가는 결국 모택동로선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② 스탈린의 개인숭배는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 의도는 나뉘어 있었는가? 첫째 스탈린 비판을 이용함으로써 현체제 비판을 시도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큰 중점이 있다. 둘째 「토틱키스트」, 우익기회주의자, 민족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에 대한 스탈린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려는 데 중점이 있다. 셋째 모택동로선 철회 자유파, 소련내 자유파를 비판하려는 데 중점이 있다.

③ 개인숭배의 결함은 이미 극복해 버렸다는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소련 수뇌자들은 첫째 「브레즈네프」정권이 현재 이상의 자유화를 더 추진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다. 둘째 집단지도제는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소련의 정치체제는 1인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 5. 브레즈네프의 발언 (1970.8.28)

금년에 들어서서 동결되었던 중소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물론 당관계와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관계에 관해서는 중소 서로가 해빙노력을 암시하게 되었다.

「브레즈네프」(Leonid I Brezhnev, 1906 ~ )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70년 8월 28일, 중공과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의 수도 「알마·아타」(Alma Ata)에서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강조하는 연설을 행한 것은 그러한 국가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한 소련측의 의사표시로서 주목을 받을만하다. 이 연설에서는 중공 문화혁명 이래의 중공 수뇌에 대한 비난이 없었다.

그 연설은 1970년 8월 체결된 독소조약, 중소관계, 중동분쟁의 해결 등 당면 중요 대외관계에서의 소련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독소조약은 단순히 독소 양국관계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② 북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양국정부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의견을 전개할 것이며, 인내로써 대하려고 한다.

③ 중소 관계 정상화는 비단 두 나라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주의 체제와 혁명적 해방 운동의 이익, 그리고 세계 평화 강화의 이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④ 이 원칙에 서서 소련은 비단 중소 국가 관계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인민의 우호회복 반제 공동 투쟁 실현에 노력한다.

첫째로, 독소조약은 유럽의 긴장완화를 촉진했다. 독소의 접근은 아시아와 유럽의 양면작전을 바라지 않는 소련이 유럽에서의 잠정적인 휴전을 얻으려는 심리에서 나왔다. 1966년 이래의 문화혁명, 1969년 3월의 「우스리강」의 무력 충돌 이후 6,000킬로 미터에 달하는 중소 국경 지대에서의 양국의 군사적 대립을 날카롭게 되었다. 독소불가침조약에 의하여 소련은 중공에 대해 크게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1970년 8월 28일 「브레즈네프」의 연설은 중공에 대해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중공의 반응은 그 연설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다.

둘째로, 「브레즈네프」 연설은 직접 중공에 대한 정상화 촉진의 제안이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의 중소 공동행동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소 두 나라 공산당 사이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다. 「소련 사회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공이 「이때올로지」 면에서 소련과 타협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소 사이의 타협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은 외교, 통상문화교류 등의

국가 관계에 한할 것이다.

중소관계가 극히 악화되었던 것은 1966년 여름 홍위병 운동으로 표면화되었던 문화혁명 이래의 일이었다. 1966년 중공은 붉은 광장 사건 등 일련의 반중공사건으로 대사를 소환하였다. 소련도 1967년 「세르게이·라핀」(Sergei G. Lapin, 1912~) 대사를 소환하였다. 그 이래 두 나라는 서로 대사를 공식으로 두었다.

1970년 4월 초 소련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아기트프르트」(敎宣部)장인 「우라지미르·스테파코프」(Urazhmir Ste-pakov)를 새로운 중공주재대사로 임명했다. 중공은 1970년 7월 중공 외무차관 유신권을 소련 주재대사로 임명하고 소련의 「아그레망」을 요구했다. 소련과 중공은 3년만에 대사를 교환하게 되는 셈이다.

중소간의 중요 교섭으로서 중소국경위원회가 계속되었으며, 지방적 교섭으로서 「하바로프스크」에서의 국경통상회담 등이 전개되고 있다. 국경교섭은 「우스리」강이나 중공아시아 국경 지대에서의 무력 충돌사건을 근절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호지명(Ho Chi - Minh, 1890~1969) 장례식 참가를 위해 「하노이」에 왔던 소련 「코스기긴」(Alekshey N. Kosygin, 1904~) 수상에 북평공항에서 주사래와 회담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이 국경 교섭은 2년 내지 3년 정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적어도 이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무력 충돌은 회피될 것이다. 「브레즈네프」발언은 시기를 포착한 발언이었다



- 주 1 ) Bertram D. Wolfe ;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New York, Praeger, 1957, Part 2 ( pp.88 - 237 )에  
의거함.
- 2 ) 공산당 노동자당 대표자회의의 성명 「전위」 177 호  
부록  
성명 pp.23 - 24.
- 3 ) 공산당 소사, 모스크바, 프로그레스 출판소, 1970, p.270
- 4 ) I. Stalin, 레닌주의 제문제, 1952 년판, 스탈린전 집간행  
회역 1953, p.835.
- 5 ) 제 22 회 대회 문헌하권( 1962 ) p.101
- 6 ) 소사, pp.284 - 285.
- 7 ) Ibid., p.285.
- 8 ) Ibid., p.286.
- 9 ) Ibid., p.286.
- 10 ) Ibid., p.291.
- 11 ) Ibid., p.291.
- 12 ) Ibid., p.339.



# 마르크스 레닌주의 비판

原 10 10 주 10 10 스트 10 10

## 마르크스·레닌主義 批判

### 서 론

이 소론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오늘날 변질되어 가고 있고 동구 위성국가에서 자유화 민주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그 이데올로기가 종말에 가까워가고 있다는 것을 정치 이론 면에서 증명해 보려는 데 중점이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은 때때로 보도되어 왔으나, 단편적 사실 ~~시만으로써~~ 이름을 체계화할 수 없다. 금년에 들어서 그 일부를 발표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그 일부를 수정하여 이 서론에서 이데올로기의 종말에 관한 제1부를 발표한다.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 위기(危機)가 크게 부르짖게 되었고 한편으로 정당 불신과 국회 불신이 크게 논의 되고 있는 이때에 민주주의의 적은 어디 있으며, 그 정체는 무엇이나 하는 것을 똑똑히 인식한다는 것은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서론에서는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비판, 정당론 비판, 전쟁론 비판 등에 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순수한 개인주의에만 집착하던 전통적 개인 지상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계급의식도 국민의식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국민의식은 세계의식과 결부되어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민주주의도 한 나라의 민주주의에만 만족하지 않고 국제적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띄게 되었다. 이 세계의 사조를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 I . 사회발전 법칙의 의문

### 1 . 정채론의 독단

사회발전 법칙을 믿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주의자들은 회의제(會議制) 정치기구를 인류 사회 발전 사상 최고의 형태라고 자가 자찬(自讚)한다. 회의제는 최고로 발달한 민주주의 형태라고 자랑한다.

마르크스 자신은 정채의 분류에 관하여 명백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계급 국가론에 입각하여 서구 민주주의자들의 정채(政體) 분류 통설과는 판이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가정(假定)을 세우고 그 가정 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들의 공통적 견해에 의한다면 만일에 민주정치가 인민의 참다운 정치의사를 결집하여 집행시키는 체계라 한다면, 동구(東歐) 민주정치가 진짜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이유로서 이렇게 설명한다.

거기서는 근로 대중의 의사와 행동이 아무런 억압도 당함 없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근로 계급의 사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부 형태도 이 동구 민주정치 정부형태의 범주 속에 넣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민주정치를 소수 독점 금융 자본가의 지배를 받는 금융 독재정치라 한다.

특히 파시즘 체제나 나치즘 독재 체제는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

주의적인 침략형식이며 자본 독재정치(獨裁)의 부패(腐敗)형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채분류는 계급투쟁론, 유물사관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본 것이며, 그 분류 기준이 석연치 않다. 특히 개인권의 보장이나 참다운 자유평등이 없는 동구 민주정치를 참다운 민주정치로 보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독재의 개념 규정도 너무나 일방적이며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정채 분류는 분류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정채 분류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곡해한 분류법이다.

매키버(Robert Morrison MacIver) 교수의 명저「정부론」(The web of Government, Rev. ed, 1965)에서 정부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구성적 기초(Constitutional Basis) 경제적 기초(Economic Basis), 사회적 기초(Communal Basis) 및 주권구조(Sovereignty Structure)를 제시했다.

구성적 기초에 입각하는 분류에 있어서 과두정부형태에는 군주정치, 독재정치, 친권정치, 다두수정치(Plural Headship) 및 직접민주정치를 포함시켰고, 민주정치 형태에는 제한군주정치(입헌군주정치)와 공화정치를 포함시켰다. 경제적 기초에 입각한다면 씨족경제적 원시정부, 봉건정부, 자본주의 정부, 사회주의 정부, 사회자본주의 정부(Sociocapitalist government), 등이 분류되며, 사회적 기초에 입각한다면, 종족정부(Tribe), 도시국가정부(Polis) 지방정부(Country), 민족정부(Nation), 다민족정부(Multi-national),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등이 분류된다.

주 권구조에 입각한다면, 단일국가정부( Unitary State ), 제국정부( Empire ), 연방정부( Federation ) 등이 분류된다. (註1)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무한한 과정에 있어서 특정 순간에 존재하는 정부형태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여러가지 형에 특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주의 형태를 부각(浮刻)시키기 위한 정부형태의 분류법은 너무나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자랑하는 회의제의 정체(正體)는 무엇인가?

정치기구로서의 회의제( Soviet System: Versammlungs-Regierung )는 양면신의 얼굴( Janus-face )이라 본다.

즉, 회의제는 민주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전제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직의 도구다.

프랑스 혁명시의 회의제는 로베스피에르( Robespierre, 1758 ~ 94 )의 독재와 테러 정치를 가져 왔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회의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은 극단 민주주의( Ultra democracy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회의제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들은 국민투표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소비에트 권력 보유자들은 회의제를 이용해 보려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이유를 내심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회의제는 헌법의 정문에 변경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권력 보유자와 권력 행사를 독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소비에트 체제에는 입헌주의적 명목론(名目論)과 권력 과정의 현실 사이에는 괴리(乖離)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① 의회 민주주의 국회에서는 정책 결정이나 그 집행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일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② 능률적인 통치기구는 과두제(寡頭制) 직안 구조를 필요로 한다. (註2)

그러므로 회의제는 필요한 행동 의사를 가지는 간부로 형성되는 폐쇄적인 소집단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회의제는 공산당 간부 소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강변하면서 회의제를 민주주의체로부터 전체로 역전시키고 있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회의제가 지니고 있는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공산당 간부의 소수자 지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회의제는 결코 최고의 정치기구가 아니다.

## 2. 계급투쟁론 비판

첫째로, 계급 투쟁론은 무자비한 투쟁론이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하고 있다. 「종래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農奴), 조합의 두목(頭目)과 공장(工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언제나 대립하여, 어떤

경우에는 암암리에 또 어떤 경우에는 공공연히 끊임없는 싸움을 한다. 그때마다 그 싸움은 전 사회의 혁명적 개조로 끝나거나, 또는 싸우는 계급의 공통적 몰락으로써 끝난다. (註3)

「이 계급 투쟁의 범위는 시초에 개개의 노동자나 일공장내의 노동자들과 개개의 자본가 사이의 부분적 투쟁에 시종되었지만 그것도 차츰 지역적인 투쟁에서 한 나라 전체의 투쟁으로, 더 나아가서 국제적 규모로서의 노자 투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註4)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2대 계급의 대립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존속되는 한 더욱더 심해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계급간의 투쟁은 현재 있는 경제관계의 근본에 잠재하고 있으므로 이 경제관계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한 지양(止揚)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옮김으로써만 해결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 계급 투쟁론은 무자비한 계급 투쟁을 고취하는 일종의 선동론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 사회에 2대 계급만을 가정하여 계급 투쟁론을 전개했다. 이 투쟁론에 의한다면 지배 계급은 투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운명에 놓여 있다고 보는 반면에 피지배 계급은 잃어버릴 아무것도 없고 조국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만일에 이것이 이 사회의 적나라(赤裸裸)한 실태라 한다면 이 사회에는 공공이익도 관용도 없을 것이며, 다만 무자비한

투쟁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자비한 투쟁만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서 유리된 사고 방식이다.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역사상 올바른 계급이라고 보고 그들의 이익만이 사회전체의 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이 사회의 노사(勞使) 협조를 너무나 무시하는 생각이다.

둘째로, 계급 투쟁론은 역사상의 사실과 반드시 맞는 이론이 아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계급을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르는 경제적 공통성에 의거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계급이 대립적 존재로 있다고 해서 곧 투쟁으로 직결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조급한 사고 방식이다. 왜냐하면, 투쟁하는 계급으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이 저마다 이익의 대립을 느끼고 투쟁 의식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결된 계급의 힘은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통 이해를 자각하고 개인의 이해보다도 계급의 이해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는한, 투쟁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

과거에도 대립이 있었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었으나 그러한 대립이 곧, 투쟁을 의미했다고는 볼 수 없다.

역사상 때때로 발생한 투쟁이 모두가 계급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종교 투쟁 같은 것도 역사에 크게 기록되어 있다.

계급의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집단은 때때로 대립해 왔으나, 그반면 때때로 연합도 해 왔다.

과거에 여러 사회계급이 대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보여 주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현대의 계급 관계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로, 계급없는 사회의 정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1930년대에 소련의 비밀 경찰은 계급의 적이라는 사람들을 몰살 시키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소련은 다른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부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

소련에서는 중류 계급을 위한 현대식 아파트가 빈민가의 언저리에 서 있다. 농촌에서는 호화스러운 별장이 초라한 농가와 같이 나란히 서 있다.

특권층과 대중과의 대조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격심하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계급 없는 사회라면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련에서 국무원의 수입이 연 약 9천 루블인데, 타자수의 평균 연소득고는 6백 내지 9백 루블이다. (註5)

여기서도 소유자와 착취자들로 형성되어 있는 세 계급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의 엘리트층은 자기들의 지위를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다. 특권층의 자녀들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얻기 어려운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네째로, 계급 투쟁론은 새로운 중간 계층의 존재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론이다. 중간 계층이 결여된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침투하고 있는 것은 이 이론이 새로운

중간 계층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새로운 중간 계층은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점점 증대하여 유력한 하나의 계층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주주(株主)가 자본가라 한다면, 기업가는 자본가가 아닌 새로운 중간 계층이라 하겠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중간 계층에는 관리 경영상의 봉급 생활자, 소규모의 독립 생산자, 독립상인, 주식증권 등에 소득 원천을 두고 있는 사람들, 기술자, 숙련 기술공, 자유 직업자 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 중간 계층은 생산에 있어서의 지위와 그 수입 원천으로 본다면, 소위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본가 계급과 결부되는 수가 많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사회에 들어 서게 된다면, 중간 계층의 소득의 원천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중간 계층은 현존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중간 계층은 자기들의 소득 원천이 전복되는 날 수입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다섯째로, 계급 투쟁론은 사회 공통 이익 또는 국민적 이익을 등한시하는 이론이다.

현대 국가에는 계급간의 이해 대립을 넘는 공통적 이해가 있다. 예를 들면 민족 이해, 국민 이해, 국가 연대 이해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독립국가에는 있다. 밖으로 국민적 독립, 또는 민족적 독립, 국민적 자유의 요구가 있고, 안으로는 사회 공통 이익 즉 공공선(Public good)의 요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민족 의식이나, 또는 국민의식보다도 차원이 높다.

계급 투쟁론은 물질적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빵없이 살 수 없다는 뜻은 물질적 가치가 생활상의 중요 가치이며, 행복의 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윤리적 가치, 정치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밖의 종교적 가치도 사회생활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더군다나 목적을 위하여 비 민주적 방법, 즉 부정 수단을 써도 좋다는 것이 증명 되지 않는 한, 혁명 계급의 현존 사회 질서에 대한 전복은 정당시할 수 없다.

혁명 계급의 이해가 사회 대다수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하는 주장은 하나의 의제(擬制)요, 하나의 자위(自慰)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소련 공산당은 10명 내외의 간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 소수의 과우어엘리트(power elite)가 2억이 넘는 소련 국민을 좌우하고 있다.

소련의 변모에 대하여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 생활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거의 대부분 환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실질상 개선은 소비자 물품, 가정용기구 및 주택의 공급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지도자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물품을 공급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국민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 공급은 여전히 단조롭고 비싸고 때로는 1962년 1963년 겨울 처럼 불규칙이었다. 소비품의 양(量)에 있어서는 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소비품의 다양성, 매력성, 질(質)에 있어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註6)

여섯째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나라는 최고 발달의 나라라고 볼 수 없다. 공산국가는 본질상 1당 독재국이며, 일대 교도소 국가이며, 경찰국가이며, 군사적 관료국가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는 공산국가에 있어서 식생활도 군대 이상 계급적 차별을 두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수행상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 국가에서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사실상 속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파업권이나 임금 인상 요구권이 전연 인정 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초보적 원칙마저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 무슨 최고의 국가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소련 증풍의 건설이나 우주과학을 운운한다. 「만약에 공업생산고와 로켓트 기술이 탁월한 사회의 기준이라 한다면, 히틀러의 독일은 성공적이었다고 무조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노예 국가나 경찰국가에서 설령 식량 공급이 보장된다고 해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국가에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註7)

그뿐만 아니라 대 건설 뒤에는 국민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노예, 노동, 농노, 노동을 구사하여 당시의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피라밋이나 대수도나 만리장성이나 공업화가 강행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는 실업자가 없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놀라운 것이 없다. 과거에 노예 경제나 농노경제에도 실업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곳 노예나 농노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작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실업자가 없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공산국가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실업자 1,300 만인(1억1천만 노동인구의 12%), 폴랜드의 실업자 150 만인, 헝가리의 실업자 120 만인, 유고슬라비아의 실업자 30 만인. (註 8)

그러면 그 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산업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감원이다. 둘째로, 비능률적이고 성분이 나쁜자나 소위 반동분자나 또는 이단자(異端者)들의 직장 추방이다.



## II. 계급 독재 정당론 비판

### 1.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당의 본질을 계급성에 두고 정당을 계급 대표로 본다. 「정당이라 함은 계급투쟁의 조직이다.

정당은 일정한 계급 속에서 발생하고, 그 운명과 결부되는 계급의 일부분이다. 계급이라는 것은 통상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며 생산에 있어서의 동등적 지위, 분배에 있어서의 동등적 지위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 즉 공통적 이해 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인류의 일 집단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 계급정당에 내립하는 특수한 정당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이해에서 떨어져 있는 어떠한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자신의 어떠한 종파적(宗派的) 원칙을 세워서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그 형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註9)

이 표현에 의한다면 공산주의 정당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 ~ 95)는 공산당의 특이성(特異性)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만 다른 노동자 계급 정당과 구별된다. ① 각 색다른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 민족 투쟁에 있어서 모든 민족 구별에 좌우됨이 없이

모든 노동 계급의 공통 이익을 강조한다는 점. ② 부르조아지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거쳐야 할 여러가지 발전 단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운동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註10)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한편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볼 때 모든 나라의 노동자 계급정당에서 가장 진보되고 가장 굳게 단결된 부분이요, 모든 다른 사람을 추진 시키는 부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또 한편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볼 때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진로(進路) 조건 및 궁극적 일반결과를 명석하게 이해한다는 이점(利点)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보다 우월하다.」(註11) 이 표현에 의한다면 공산주의 정당이 혁명적 노동자 계급의 전위(前衛)라고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당 전위론(黨前衛論)은 스탈린에 이르러 더욱 강조되었다. 전위당 이론은 직업 혁명가 정당론(職業革命家政黨論)이다. 이 정당 이론은 두 가지 노선(路線)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첫째로, 전위당 이론은 자연 발생적인 대중 운동에 대하여 반대한다. 왜냐하면, 만일에 노동 운동이 자연 발생적인 대중 운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전개하게 된다면 그 운동은 필연적으로 부르조아 지배율로기에 종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둘째로, 전위당 이론은 노동조합주의(勞動組合主義)에 대하여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주의란 것은 결국 부르조아지에

대한 노동자의 사상적 노예화(奴隸化)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의식성(意識性)이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혁명적 의식성은 노동 계급 밖으로부터 근로대중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첫째로, 혁명 이데올로기와 혁명 이론을 노동 대중에게 공급하는 지적(知的) 이리스토크라시가 필요하다.

이 전위당은 직업 혁명가로서 구성된다. 둘째로, 당 기관은 당원 대중에 대하여 고도의 지도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같은 이유를 근거로 삼아 레닌주의자들은 전위당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면 스탈린은 이 이론을 어떻게 전개 했는가?

본시 정당은 계급을 대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떠한 계급이라도 완전히 균일적인 전일체(全一體)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소박한 생각이다.

같은 계급 속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의식에 반영 된다. 이 계급의 부동성(不同性)이야말로 정당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계급의 부동성이 왜 정당을 필요로 하는가?

「노동 계급의 투쟁은 불가피적인데 이 투쟁에 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도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것은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훈련이 잘 되고 가장 굳게 단련된 부분이 아니면 아니된다. 이 부분이 그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정당이다. 정당은 계급의 두뇌(頭腦)요 계급의 전위다.

즉,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대요 그 조직대요, 계급조직의 최고형태요, 프롤레타리아트 조직의 핵심(核心)이요, 분파를 허용하지 않는 단일의지(意志)의 통일이다。」(註12)라고 한다.

전위대로서의 당은 전략 전술에 의해서 민중을 당의 노선에 묶어 세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위대만으로써는 승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광범한 대중이 전위에 대한 직접적 지지, 또는 적으나마 유리한 중립적 태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전위대만의 결정적 투쟁으로의 돌입은 허사(虛事)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는 정당과는 판이(判異)하다. 즉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는 정당이라 함은 사회 이익 단체이며, 정치적 수단을 독점해서 자기의 정치적 주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실현하고 지배적 지위를 욕망하는 영속적 단체라 볼 수 있다. 정당은 단순한 계급적 이익 대표 집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당은 민주정치를 전제로 하여 합법적 존재로서 부분 이익보다 전체이익을 표방(標榜)한다.

공산주의 정당은 당원을 통솔하는 방법으로서 비판과 자이비판(Kritika i samokritika)을 흔히 이용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듣기로 하자.

「비판과 자이비판(自我批判)이라 함은 근로자의 이익을 표현하고, 근로자의 국정(國政)에의 참여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최고 유형의 민주주의인 새로운 소비에트 데모크라시의 표시이며, 그러한 비판 없이는 참으로 혁명적인 철(鐵)의 규율

하에 모여진 프롤레타리아트 당을 창조할 수도 없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치적으로 육성할 수도 없고, 자기자신의 벽열 속의 적을 적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註 13)

「일단 창조적인 토의, 즉 비판과 자이비판이 없다면 전진도 없어진다. 창조적인 토론과 객관적인 비판 구속을 받지 않는 비판이야말로 창조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비판도 창조적인 토론도 없는 곳에는 발전의 원천도 고갈하여 곰팡이 냄새와 침체(沈滯)에 일룩는 미지근한 환경이 박는다.」 「비판과 자이비판은 사회주의적 건설에 있어서 결합을 발전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전진의 열쇠이다. 여기에 진보의 비밀이 있다.」(註 14)

비판에는 소위 자이비판과 상호비판이 있다. 자이비판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비판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 비난하고 혹은 시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비판의 장소는 회의다. 회의에서 비판의 초점에 오르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그것이 우연한 동기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상성과 결부시켜 그 요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시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자이비판이 불충분하거나 잘못을 모두 고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비판이 집중되며 고문(拷問) 이상의 고통과 굴욕을 느끼게 된다.(註 15)

「북괴는 비판을 이론적으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

물론 이 이론은 부피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레닌·스탈린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비판은 적대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 사회에서는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타협적인 계급 투쟁이 필연적이지만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적대적 모순은 없고 다만 비적대적 모순 즉 서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모순이 있을 뿐이므로 교양과 설복(設服)의 수단인 비판이 비적대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註16)

오kin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적대적(非敵對的) 모순이라 이해했고, 비판을 그 모순 해결의 무기라고 주장하였다. 뒤에 비판하는 바와 같이 자비비판에 관한 공산주의 이론은 공산주의 사회체제(社會體制)에 대한 저항 분자를 사전에 적발하자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2.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당의 기능

독재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의 기능은 외견상의 기능과 실질상의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외견상으로는 민주주의 정당의 중요 기능과 거의 같은것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 제정의 정당도 민주정당에서 볼 수 있는 매개(媒介)적 기능, 연결(連結)적 기능, 계몽(啓蒙)적 기능, 지도자 선정(選定) 기능 같은것을 발휘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당의 실질적 기능을 살펴보면, 그 의견상의 기능과는 판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 정당의 실질적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기능은 낡은 질서의 파괴(旧秩序의 破壞)에 있다. 본래 공산당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싸움에 있다. 그러므로 공산당원들은 재래식 용어와 가치관을 버리고 색다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색다른 일면적인 가치에 따라서 살아 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니된다.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현상유지(Statis quo)를 요구하는 보수주의나 재래식 가치관을 존중하는 질서유지 방식은 오히려 방해물로 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현상을 타파한다는 것(non-status quo), 즉 낡은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새로운 명일을 보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독재주의 정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 걸쳐서 실천 가능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새로운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낡은것을 서서히 개혁하려고 하는 개량주의자의 수법(手法)은 공산주의 계통의 모든 정당 생리(生理)에 맞지 않는다.

둘째 기능은 강력한 단일적 통제(monolithic control)에 있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은 다양한 것의 조화(調和)나 다원(多元)적 방법의 묘미(妙味)를 처음부터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나 공산주의 정당은 다양한 방식을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획일(劃一)주의를 좋아하고 하나로 된 통제를 좋아한다.

공산주의 정당의 통제는 다른 독재주의 정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일적인 강제에 있다. 따라서 거기서는 국민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한다. 공산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사이 즉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사 전달 통로는 하향식(下向式) 일방 통로뿐이다.

세째 기능은 정치경찰, 즉 비밀 정보 기관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vox populi)를 파악하는데 있다.

본래 독재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상향식(上向式) 의사 전달이 미약하거나 또는 결핍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신속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고 그것을 수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집권자는 언제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독재 정치하에서는 국민의 소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재자와 그 독재 정당은 참다운 국민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불평을 덜기 위하여 정치 경찰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노력한다.

사실인즉, 오늘날 공산 독재정당은 국민의 동태에 관하여 정치 경찰 기관의 루우트를 통하여 정보 지식을 얻고 있다.

이 루우트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공산당의 또 다른 정치전략 내지 정치전술에 이용된다.

네째 기능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정치를 위한 새로운 간부 내지 지도 세력의 육성 확보에 있다.



공산당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배 엘리트( elite )를 창조하고 보전하고 더 나아가 확대 시킨다. 공산·독재하에서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독재당의 각종 결정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공산당이 투쟁적 핵심 당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대중은 그러한 자기희생적 투쟁 당원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보수를 언제나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공산당은 국가 요원의 선정·등용·배치라는 인사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활동 성격과 그 방향을 지시한다. 공산당은 국가기관의 활동을 검열한다.

정부 기관은 공산당의 예하 기관이므로 공산 독재의 권력핵( 權力核 )은 공산당의 몇몇 간부이다.

### 3.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론 비판

이상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당의 기능론에서도 이 방면의 정당론 비판이 지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외의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각도는 일반정당 이론 면에서 보고, 둘째 각도는 당원 통솔 방법으로서의 자아비판의 정체( 正體 )에서 보고, 셋째 각도는 선거론 각도에서 보겠다.

## A. 일반 정당론 비판

① 정당은 계급 독재정당론의 주장하는 식으로 계급분열에 따라 성립되는 정치 집단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정당 분열선(分裂線)은 반드시 계급 대립선(階級對立線)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당은 계급보다도 적은 구분 위에서 있다. 만일에 정당과 계급이 일치한다면 소위 부르주아지당과 프롤레타리아트당으로 나뉘어지고 그 사이에 적어도 조그마한 중산 계층당을 가질 정도로 그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르주아지당도 프롤레타리아트당도 중산층도 각각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다. 물론 이 사실은 정당과 계급이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은 반드시 계급선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정당은 근대 계급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존재 의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근대 계급의 2대 대립이 성숙함에 따라 그 존재 의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註 17)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계급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분열되어 여러 정당에 흡수되어 왔다. 오늘날 보수주의 정당도 노동조합을 포섭하고 있다. 더군다나 다당(多黨)제, 나라에서 계급 분열선과 정당 구분선을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논법이다.

②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론은 민족적 이해가 계급적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잊어 버리고 있다. 민족과 계급은 현대 정치의 2대 요인이다. 계급이 분열적 요인인데 대해 민족은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통일적 요인이다.

정당은 통상적으로 민족적 기반과 계급적 기반에 걸쳐 있다. (註 18) 단일 민족국가에서, 특히 계급적 분열이 뚜렷하지 못한 곳이면 계급적 이해관계보다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 우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민족적 운명이 있을 후에야 비로소 계급적 운명이 있을 진대, 민족의 독립과 통일과 번영을 무시하고 외세(外勢)에 의지해서 계급 독재를 피한다는 것은 국가 정치의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을 올바르게 인식한 정치 방향이라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공산당과 같이 계급 정당이 미악한 나라에서 공산당 운운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유쾌하게 느껴진다」

(註 19)

영국 공산당은 헝가리 혁명이 일어난 후 당원의 4분의 1을 잃어 버렸으며, 전후 최저 수준인 2만 5천명으로 감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註 20)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에 있어서 공산당의 당원은 전 인구의 1%의 50분의 1인 2만 5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註 21) 그런데 1965년 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후우버(Hoover) 국장이 법무성에 제출한 조사 보고에 의한다면, 1964년 현재 등록된 공산당수는

약 1만인이며, 미등록 동조자는 약 10만인으로 추산되어 있다. 한편 미국 사회당(Socialist Party of America)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약 6천2백만 표중, 2,044표를 얻었고, 196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요지상 사회당의 이름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당은 사실상 해체되어 있다.

오늘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리로 삼고 있는 나라의 정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소련 및 위성국의 공산당은 정당이 아니다. 과거에는 독일의 나치스당도 이탈리아의 팻쇼당도 다 같이 정당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집권후 반대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③ 계급독재 정당은 정당의 3차원(dimension)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계급 독재정당이 계급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할 때에도 정당이 국민적 이익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사실상 활동한다.

그 이면에 국민적 정당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계급적 이익으로 흐른다. 더욱이 오늘날의 외교는 국가의 총력을 반영하는 까닭에 초당(超黨)적 초계급적으로 아니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당에서 운운하는 계급적 이익이라는 것이 절대적 본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전세기적 사고 방식이다. 현대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정당은 단순한 계급 정당이 아니라, 계급적·국민적·국제적이라는 3차원 속에 존재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계급이라는 개념도 변화해 가고 있다. 오늘날 계급이라는 개념도 여러가지로 이해되고 있겠다. 즉

즉, 계급이란 생활 수준에 기초를 두는 사회계급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생활 수준을 중시하지 않고 생산과정상의 동일한 지위로 단정하는 경우, 또는 사회 직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이 계급의 뜻도 여러가지 경우가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짚아 말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실사회의 계급도 유동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4) 프롤레타리아트당이 전 계급중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잘 훈련되어 있고 가장 굳게 단결된 지도부분, 즉 전위대라고 자처하는 것은 가치관단의 표준을 어디다 두는 것인가?

「정당이 자유로히 당원 공모를 중지하고 사교술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중점을 두고 당원을 확대하는 경우에 그 당원이 실령 훈련을 잘 받았다 할더라도 당원이 민족의 엘리트가 되건 또는 계급의 엘리트가 되건간에 정당은 변질 이니 할 수 없다. 20세 이하의 평원으로 조직되는 폭력 조직에 직결된 정당은 정당 조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군대 조직에 가까운 존재라 하겠다. (註 22)

제2차 대전 후 세계 각국 프롤레타리아트당의 간부가 오늘날 현대식 마키아벨리즘적 관료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벌써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공산당은 일종의 관료주의적 조직체제와 관료주의적 독선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중공에 있는 유일당은 중세적인 무서운 전제자요 현대적인 간인 간교(奸)한 독재자라는 것이 솔직히 지적되어 있다.

(註23) 오늘날 공산당 간부들은 전 계급의 신보분자 전 위대가 아니라, 전국민의 적이 되는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다.

공산당 간부들은 확실히 새로운 계급이다. 「사회 전체를 지배한다는 노동자 계급의 명목하에서 이 새로운 계급이 확립하는 목적은 주로 노동자 계급 자체에 대한 목적을 말한다. 이 목적 지배는,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지식 계급의 지배를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계급의 권력과 이익이 주로 공업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새로운 계급은 공업없이 그 지위 내지 권위를 공고히 할 수 없다」

(註24)

「새로운 계급은 공업화를 달성하고 나면 야만적인 폭력을 강화하고 인민을 약탈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창조도 할 수 없다.」(註25)

육체 노동 계급이 사회 질서를 전복 또는 변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들을 출신 성분이 좋은 분자로 보거나 또는 공산당의 핵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독선(獨善)이요 하나의 자기 도취(陶醉)라 생각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육체 노동 계급은 잃어 버릴 것이  
없어서 사회개조의 심리를 가지는 이외에 태업·불매동맹·파  
업 등의 심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파괴적인  
심리력과 물리력은 건설과 진보의 구상에 결부될 때 비로소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당에 있어서 육체 계급이 커다란 구실을 한  
다 하더라도 그 계급 자체만으로써는 당을 전진시키지 못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이 프롤레타리아트당도 육체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지식 계급의 지원을 얻었을 때 비로소 혁명에 성  
공했기 때문이다.

노동 계급 단독의 힘만으로써는 어떠한 방식의 사회주의  
혁명도 성공할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트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훈련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자각과 자발적 복종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무조  
건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니 거기서 요구되는 훈련은  
군대식 맹목적 복종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에서는 상부 지령  
(指令)에 대한 맹목적 복종만 존재한다.

거기서는 복종의 거부( 거부)가 죽음을 의미한다.

거기서는 지배의 근거가 객체, 즉 피지배자에게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 B. 자아비판의 정제

공산당에서 남용되고 있는 자아비판 (self-criticism) 은 민주주의 정당에서 말하는 자기반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註 26) 후자의 경우에는 자당의 발전을 위하여 자당에 대해 회고하는 솔직한 반성이다, 타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자아비판 뒤에 숨어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당원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공산당의 자아비판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아비판은 상부 당부에서 이미 결정한 정책의 완수 집행에 광범한 주의의 초점을 돌리는 방법이다.

둘째로, 자아비판은 무능·부패·태만 간부들을 혼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즉, 당 간부의 자아비판은 자기의 무능·부패·태만을 스스로 자백시키는 강제 수단이다.

셋째로, 자아비판은 어떤 간부를 마치 이리때에 던져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즉, 이것은 어떤 간부들 무자비하게 비판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수단이다.

넷째로, 자아비판은 당의 만능성을 당원들에게 과시(誇示)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당원은 오류를 범하지만, 당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제로 되어 있다.



다섯째로, 자아비판은 서구인이나 동방에의지 국민에게는 특히 불쾌한 의식이다. (註27)

여섯째, 자아비판은 당원 내에 숨어 있는 저항분자 내지 저항 세력을 사전에 적발 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이 자아비판에는 이러한 숨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요 무기로 삼아 당원 통솔에 이용하고 있다

자아비판이 어떤 감독자 1인앞에서 실시한다면 자아비판하는 그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다수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확실히 인권유린에 속하는 야비한 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산당은 상호 비판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람의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상호 비판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묵살하는 쓸렬한 가치 박탈의 한 수단이다.

#### ○ 공산주의 국가의 선거비판

소비에트 연방의 선거 제도를 일별(一)한다면, 헌법상의 근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략상의 공산당 통제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 정략상의 병용 원칙이란 무엇이나 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정치 형태를 취한다는 명목하에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에 의거하는 후보자 추천 제도를 채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먼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는 공산당·노동조합·협동조합·청년단체·문화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있다.

즉 독재당과 그 산하 단체만이 후보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는 대략 다음의 세 단계를 밟는다.

첫째, 추천단체 직원 총회에 지도 분자로부터 당원·분부·비당원·분부 후보자로서 하모(何某) 씨를 추천 지명한다.

둘째, 그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거수(挙手) 방법 또는 기립(起立) 방법으로 만장일치로 찬동한다.

셋째, 피천자는 입후보를 수락한다.

이와같이 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추천 단체가 후보자를 선거일 30일 이전에 당해 선거구 위원회에 등록한다. 선

선거구 위원회는 후보자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선거구 주민의 언어로 인쇄하여 선거 15일 전에 선거 소 위원회에 배부한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은 1 선거구 1인주의로 정해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등록된 자는 거의 무투표 당선자와 같다.

유권자는 유형 무형의 압력에 의하여 전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관례로 투표가 국민의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는 국민의 의사가 묵살된 의식이 진행 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소련 공산국가에서는 99.99%의 민주정치가 실시된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일 후보자에 대한 강제 투표인 까닭에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억압하는 비민주적 정치행위냐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한다.

북괴 헌법 제 3조에 의한다면,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이(里) 인민회로 부터 최고 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선거 한다.

주권 기관의 선거는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써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별·민족별·성분·신앙·거주기관 재산 및 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북괴 헌법 제 2조 제 2항에 친일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등선거와는 거리가 먼 차등선거(差等選舉) 제도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제1차 선거(1948. 8. 25)와 제2차 선거(1959. 8. 27)에서 이용했던 흑백함(黑白函) 투표 방식은 기표의 비밀성을 보장하지 않는 일종의 공개 투표 방식이었다.

셋째로, 제3차 선거(1962. 10. 8)와 제4차 선거(1967. 11. 25)에서 이용된 단일함(單一函) 투표 방식에 있어서도 투표 투표 용지에 반대 표시를 하게 되면 그 기표 행위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네째로, 후보자 추천제도는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단일 선거구에서 공산당이 주재(主宰)하는 대의원 후보자 추천 회의의 회의록을 구선거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북괴 헌법상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도 불구하고 제1기는 임기가 9년이었고, 제2기는 5년이었고, 제3기는 5년이었다.

제3차 선거와 제4차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 찬성을 다 같이 100%라는 것은 독재당의 선거 조작이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註 28)

### Ⅲ. 공산주의 전쟁론과 그 비판

#### 1. 마르크스·레닌의 전쟁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해 적지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역사의 연구는 전쟁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투쟁의 현상은 인간 발전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국가의 성립 성장 쇠퇴는 때때로 전쟁과 직결된다. 군사적 역사관의 결점은 사건의 원인으로서의 전쟁보다도 사건의 결과로서 전쟁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과연 전쟁이 때때로 국민생활과 문명생활에서 전환점을 생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쟁의 극적인 신속성과 결정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쟁으로 이끌고 그 복잡성에 도움을 준 수많은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요인의 주의를 돌릴 수 없었다.』(註 29)

유물론자들은 전쟁을 물질적 요인의 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는 전쟁론에 관하여 체계적인 저작을 발표한 바 없으나, 그의 발표문 중에는 전쟁에 관한 것이 적지 않다. 마르크스는 실력주의자였다. 마르크스가 역사발전의 중요제기를 계급투쟁에 있다고 보고 전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현내 공산주의 전쟁론의 이론적 성격이나 그 방법의 원형(原型)은 마르크스에 있다.

마르크스 전쟁관의 근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한 관념과 각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협동에 의한 세계혁명이라는 관념이었다.

전쟁은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나타나고, 계급사회의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사멸(死滅)과 더불어 없어진다고 그는 보았다.

근대전쟁의 참다운 사회적 정치적 성격은 개인이나 단체나 또는 여러 민족의 선량한 의지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전국 지배 계급의 객관적 정세 분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전쟁의 성격은 교전국 지배 계급이 행하는 현실적인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그는 보았다. 따라서 계급사회가 존속하는 한 계급적 억압이 존속하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전쟁이란 사회적으로 누적(累積)된 여러가지 모순을 급격히 해제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전쟁과 혁명은 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을 급격히 해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을 뿐만아니라 양자가 내면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쟁이 때때로 혁명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에 의한다면 자본주의 내부에 생긴 여러가지 모순이 필연적으로 유럽 여러나라의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註 30)

전쟁은 그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는 유럽전쟁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유럽 혁명주의자들이 반드시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소위 진보전쟁에 대해서는 찬동해 왔다.

그런데 그는 전쟁의 발발을 막고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 일파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된다면 전쟁이 없어진다고 믿었다. (註 31)

전쟁을 방어전쟁(防禦戰爭)과 공격(攻擧)전쟁으로 나누어 생각한 그는 전자를 긍정하면서도 후자를 반동이라고 비난했다.

징병(徵兵)에 의한 국민개병(皆兵)적인 상비군의 성립이 근대국가의 중요 특징이라고 본 그는 장차 상비군 제도를 지양하여 민병제도(民兵制度)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당시의 보살(普仏)전쟁에서 얻은 교훈으로서 무배상무병합(無賠償無併合)의 원칙을 역설하였다.

레닌(Vladimir #1. Lenin, 1870 ~ 1924)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전쟁계획(The War Program of the Proletarian, 1917)에서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써 표현되는 정치의 계속이며, 현재의 제국주의 전쟁은 두 집단의 강대국이 쓰는 제국주의 정치의 계속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는 제국주의 시기의 여러 관계의 총계(總計)가 이것을 발생시키고 육성시킨 것이다. 이 제국주의 시기는 필연적으로 민족적 억압에 대한 투쟁의 정치와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정치를 발생 육성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① 혁명적 민족의 반항과 전쟁, ②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과 반항, ③ 혁명전쟁의 두 종류의 결합이라는 세가지의 가능성과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다.』 (註 32)

레닌은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 1917)의 제1판 서문에서 『제국주의전쟁은 독점 자본주의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의 전화(轉化)과정을 극도로 촉진하여 첨예화(尖銳化)시켰다.

전능(全能)적인 자본가 단체와 점점 긴밀하게 융합해 가고 있는 국가는 근로 대중에 대한 터무니 없는 억압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신진 여러 나라는 노동자들에게는 군사 감옥(軍事監獄)으로 화해가고 있다. (註 33)

레닌은 앞서 인용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전쟁 계획』에서 전쟁과 혁명을 결합시켰다. 그는 목적을 위하여 이성(理性)이나 인도(人道)를 무시하였다. 전쟁의 참다운 내용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모순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그는 단정하였다.

그는 각국 사회주의 정당이 배외주의(맹목적 애국주의 chauvinism)로 빠진 배신자(背信者)라고 비난하였고, 제 2 인터내셔널의 사멸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프롤레타리아트적 슬로우전이라고 주장했다.

(註 34)

20세기 초두에 세계가 제국주의의 단계에 들어간 뒤에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했다.

『①제국주의 국가 상호간의 전쟁, ②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또는 사회주의가 건설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반혁명의 전쟁, ③식민지 여러 나라에 제국주의자의 억압 전쟁과 결부되어 있는, 특히 이러한 여러 나라의 반제국주의적 민족혁명 전쟁』(註 35)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의 진보전쟁 두 가지와 한 가지의 내란을 인정했다. 즉, 첫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르췌아지에 대한 내란이며, 둘째는, 식민지나 반식민지(半植民地)나 또는 작은 나라 괴압박



민족이 일으키는 민족전쟁이며, 셋째는 프롤레타리아트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전쟁이다.

레닌은 국가의 존속을 고려하여 군비철폐(軍備撤廢)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군비철폐 사상이란 그야말로 비역사적인 견해이며, 군비철폐의 슬로우건이 모든 전쟁 부인 사상을 포함하고 실력 부정(否定) 사상을 포함하기 때문이라 한다.

소위 부르조아!민주혁명 전야에 있는 사회 단계에서는 전 국민의 무장이라는 슬로우건을 내세워야 한다고 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료하고 사회주의 건설로 매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늙은 군대의 건설이라는 슬로우건을 내세워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레닌은 유격전(遊擊戰)을 시인하는 동시에 무장 봉기주의를 역설하였다. 레닌도 마르크스의 무명함 무배상 원칙을 계승했다.

레닌의 조국 방위(defence of fatherland) 사상은 무엇이었던가? 만일에 한 전쟁의 참다운 성질이 다른 민족의 억압을 격파하는데 있다고 한다(1789년 - 1871년에 이르기까지의 유럽), 전쟁은 억압 당한 국가 내지 국민 측에서 볼때 진보적이다.

그러나, 만일에 전쟁의 성질이 식민지의 새로운 분할이며, 획득의 분배이며, 외국의 침략인 경우에는(1914 - 1918 제1차 대전) 조국 방위라는 표현은 전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레닌에 있어서는 참다운 민족 전쟁에 있어서 조국 방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결코 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다운 조국 방위가 등장하게 된것은 소련이 성립된 이후라고 아전 인수(我田引水)격으로 말했다.

스탈린 ( Iosif Vissrionovich Stalin, 1879 ~ 1953 )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으므로 부정주의자였고 팽창주의자였다. 스탈린은 레닌의 전쟁관을 변조하여 전쟁을 정의 (正義)의 해방전쟁 (解放戰爭)과 부정의의 침략 (侵略)전쟁으로 나누었다.

제 2 차 대전은 독일 (獨伊日)의 파시스트 군국주의자의 부정의 침략전쟁에 대한 미영소 (美英蘇)의 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옹호를 위한 정의 전쟁였다고 보았다. (註 36)

『파시스트·독일과의 전쟁을 보통 흔히 보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나라 군대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전 소비에트 인민의 파시스트 독일군에 대한 위대한 전쟁이다.

파시스트 압제자에 대한 이 전인민적 조국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소련위에 떨어진 위협의 청산일 뿐만 아니라 독일 파시즘의 폭정하에서 신음하는 유럽 국민 전체에 대한 도움에도 있다. ....  
...조국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한 이 전쟁은 유럽 및 미국 국민의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합류한다.』 (註 37)

스탈린은 제 2 차 대전 때에 이와 같이 조국전쟁이라 외치고 공산주의 특유의 계급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는 조국전쟁 국민 방위전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냈다. 그도 유격전을 많이 이용하였다.

제 2 차 대전 후 스탈린은 레닌의 무병함 무배상 원칙을 버리고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동 유럽 (東歐)과 아시아에서 위성국을 만들었다. 스탈린은 아일 (俄日)전쟁의 옛 원한에 대한 보복 (報復)

이라는 복수(復讐)관념을 고취하여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스탈린은 전쟁관에 있어서 국제주의적 공산주의자로서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배타주의적 국민주의자로서의 소박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의 가능성에 관하여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① 사회주의 국가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방위 전쟁의 가능성
- ② 제국주의 국가와 그 매판(買)인 자기 나라의 세력에 대한 민족독립 전쟁, 국가 주권 옹호 전쟁,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 가능성은 배경으로 후퇴되어 있다.

## 2. 공산주의 전쟁론 비판

『전쟁이란 색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이며, 국가 대외정책의 한 가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그 대외정책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이용한다. 국가는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될수 있는대로 평화적이며 희생이 적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만일에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가는 결국 비상적(非常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력적 수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그 생명적 이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에 호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註 38)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전쟁관은 표리(表裏)가 맞지 않고 너무나 과격적인 가담에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첫째, 공산주의자의 전쟁관은 무력적 실력주의에 입각하는 반평화(反平和)주의 이론이다. 즉, 그것은 호전(好戰)주의 이론이다.

그들은 최대 규모의 폭력 형태인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도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에 관하여 비상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으나, 평화에 관하여는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평화 공세(平和攻勢)는 하나의 공세이며, 어디까지나 전쟁과 전쟁 사이의 잠정적 공작이며 보다 더 큰 전쟁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의 공작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보다 전쟁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무력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일편(一片)의 인도주의(人道主義)도 없으며 복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일말(一沫)의 인도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감상파(感傷派) 자유주의자들은 기만전술(欺滿戰術) 기습(奇襲) 전술에 넘어가기 쉽다.

영국보수당은 이 점을 유의하여 강력한 군비의 뒷받침을 가지는 평화를 주장한다. (註 39)

둘째, 공산주의자들의 진보전쟁(進歩戰爭)은 일종의 세력확장 전쟁이다. 마르크스 이래의 전쟁론은 진보전쟁을 찬양하고 반동전쟁(反動戰爭)을 배격한다고 했다. 역사상 부정을 정벌하고 사회적 부정 부패를 제거하여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연 전쟁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상 진보전쟁의 사실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전쟁 수단에 호소하여 진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진보를 위하여 최후의 전쟁을 감행한다는 사고 방식은 결국 전쟁 일반을 긍정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의 한국 전란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진보적인 해방 전쟁이라 강변(強辯)했지만, 북괴의 남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세계 평화의 전당인 국제연합은 한국 전란에 개입한 중공을 침략자라고 낙인(烙印)을 찍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전란은 공산주의자들의 호전 주의의 현저한 표현이며, 소련 확장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소련이나 중공이 오늘날 팽창주의자(膨脹主義者)라고 공인되어 있으니 만큼, 세계 혁명이란 참으로 세계 사회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련 중심 또는 중공 중심의 독재적 세계 지배를 만들어 내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확장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쟁을 진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진보 전쟁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르조아지에 대한 전쟁, 피압박 민족의 제국주의국에 대한 민족전쟁 및 사회주의국의 자본주의국에 대한 전쟁의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소련 중공의 팽창주의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산국 내지 공산집단의 진보 전쟁은 결국 소련 이익 또는 중공 이익에 봉사하는 변질된 침략 전쟁임에 틀림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전쟁을 이용한다는 태도 내지 정책을 버리고 평화리에

혁명을 실현한다는 태도 내지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호전주의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셋째, 무장 봉기(武裝蜂起)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의 일반 공식이다. 공산주의는 쟁취 하여야 할 목표를 평화에 두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쟁을 내란으로 인도하여 자국 정부를 패배시키고, 그 혼란에 편승하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수행한다는 공식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외국 침략군이 자기 나라 정부군뿐만 아니라 혁명집단 무장 봉기 부대마저 괴멸시킨다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내란(內亂主義)은 철저히 계급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쟁 중에 국민이 조국 방위보다도 계급 이익 추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이 단결해서 자위적 방어 전쟁(防禦戰爭)을 완수하여 민족의 생존을 수호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무장 봉기를 폭력 혁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 공식은 공포와 폭력을 미워하는 현대인의 자유의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무장 봉기주의는 평화적 건설이 현대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무장 봉기 전술이 허용되어야 할 유일한 경우는 외래 침략군에 대한 전 민족의 생존 수호를 위한 민족적 저항 때뿐이다.

네째, 공산주의 전쟁론에서 주장하는 무배상 무병합 원칙(無賠償無併合原則)은 하나의 기만 전술이다. 범죄적 전쟁 도발자에

대한 응징(膺懲)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배상병합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강요당한 민족이 생존의 위협을 아니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배상 무병합 원칙은 하나의 이상론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그 원칙을 한 싹처럼 내어 버렸다. 소련은 제2차 대전후 일본으로부터 남태(南太)와 천도 열도(千島列島)를 탈취했고, 동유럽(東歐) 여러 나라를 위성국(satellite states)으로 만들었고, 북녘 땅에 괴뢰집단을 만들어 한국 통일을 방해했다.

소련은 핀란드 일부를 점령하여 위성공화국 백러시아 속에 흡수해 버렸다. 소련은 양단된 나라와 일본에 대하여 중립화를 노리는 반면, 호시탐탐(虎視眈眈)하고 있다. 중공은 티베트를 점령하여 그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유린했다. 소련의 중동(中東) 진출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진출도 확장 정책의 단적 모험이라 하겠다.

다섯째, 공산주의 전쟁론은 현실적으로 자위(自衛)한도를 넘는 군비 확장론과 직결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군국주의(軍國主義)를 배격하더라도 일종의 공산식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군비의 확장에 광분(狂奔)한다. 공산주의도 무정부주의 같은 무조건 권력 거부 아닌 까닭에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위 무장인 군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우선 수긍된다.

과연 군대는 국가의 독립과 자유의 보장물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군대 형성에 관하여 지나칠 정도의 계급주의에 빠져 있으며 무정부주의의 본성으로 인하여 자위 한계를

필선 넘는 거대한 군비 축적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현존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저의(底意)는 그들의 극단 계급주의를 옹호하는 데 있다.

군비 확장에 여념이 없는 공산주의자들이 비공산주의 국가와 일전도 불사(不辭)한다는 호전적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적화와 세계 제패를 단념하지 않는 한 군비 확장이 정지될 이(理)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과 중공은 식민지 약소국가의 피압박 민족의 혁명적 독립전쟁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행위는 바로 지나친 군비의 배경에 감행되는 야욕의 발로인 것이다.

아시아 사람의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의 아프리카라는 민족주의의 표현이 계급 투쟁을 고취하는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국가의 이용 대상이 되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다. 그것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 IV.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종말

### 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종말의 원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제2차 대전 후 그 신화(神話)와 현실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종말(終末)에 가까워 가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는가? (註40)

첫째로, 복지국가(福祉國家)정책의 착실한 실현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짓약속을 일주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성공하여 각종 사회적 모순(矛盾)을 하나 하나씩 해소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제도의 개선 확충 등으로 국민의 상당한 수가 교육의 혜택을 크게 입고 있다.

둘째로,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양심 신장의 자유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독선적 사상을 분석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셋째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인 전체주의적 신화는 오늘날 과거식의 만병통치약(Panacea)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신화는 서구식(西歐式) 생활 양식보다 매력이 적은 것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계획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현대 사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각 전문가의 전문지식은 공산주

의 이데올로기 같은 추상적(抽象的)인 일반 원리의 위력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현실 생활의 사실과 맞지 않는 추상적 원리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섯째로, 공산주의는 인도주의(Humanism)를 무시한다. 예를 들면, 북괴의 대남공작대원(對南工作隊員)은 부부(夫婦)관계가 무자비하게 유린 당한채 중앙 당학교 입교나 소련 유학이나, 또는 중공 유학 등의 감언(甘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반동 분자 숙청에 앞서서 이론박자 백서나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이나 사형(死刑)집행의 물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공산주의 집단이 허위 사칭(詐稱) 기만(欺瞞)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나 죄인 아닌 사람에게 실질상 자살(自殺)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도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타협이나 절충은 일종의 굴욕이며 무자비한 투쟁만을 강요한다.

## 2. 자유 민주주의 지지의 요인

첫째로, 오늘날 자유사회에서는 교육이 크게 보급되어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정치를 자각하는 계층도 크게 늘어났다. 물론 정치의식의 양양에 도움을 준 것은 비단 교육의 보급뿐만 아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 새로운 중간 계층의 증대, 문명의 상대적 감소 사회적 유동성(Mobility)의 확대, 도시화의 진행 고립적 농촌 집단의 후퇴 등도 정치의식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둘째로, 자유 사회에서 현대인은 자유 구속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구속이 좌익적 구속이건 또는 우익적 구속이건간에 다 같이 현대인은 자유 구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대인은 내면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계 문명의 혜택을 입기 위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인은 매일 텔레비전·라디오·신문·잡지·영화 등을 통해서 새 소식과 새 지식을 흡수하여 정신적 영양 섭취에 여념이 없다.

셋째로, 자본주의 성립과 결부되어 봉건제도 타도에 이바지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 즉 시민 계급의 이데올로기는 벌써 세계사적인 임무를 다 마치고 고전(古典)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념(理念)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초역사적(超歷史的) 초계급적이다.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안전한 해방과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한 모습을 바꾸어 계속 주장될 것이다.

네째로, 자유 사회에서 현대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각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국제 스포츠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자유 민주주의 옹호인들은 보편 타당성(普遍妥当性)이 희박한 자기류(自己流)의 독선주의나 새로운 파시즘계의 소위 매카아디즘(McCarthyism)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독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 註 1 ) R.M. MacIver, The Web of Government, (The Macmillan Co. New York), Rev. ed., 1965, P.114
- 2 ) Karl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57 Part I, Chap. 4(5)
- 3 ) Marx und Engels, Das Kommunistische Manifest, 1848 ; L.S. Feuer(ed. by),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Marx and Engels, 1959, P.7 ; M. Eastman, (ed. by), Capital and other Writings, 1932, P.321
- 4 ) Feuer, Ibid. P.17 ; Eastman, P.331
- 5 ) Eugyne Lyons, 50 years of Soviet Communism, A Look At The Record, 1967, Chap.4
- 6 ) Adam Bromke, (ed.), The Communist States at the Crossroad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P.8
- 7 ) E. Lyons, op. cit., Introduction, P.8
- 8 ) 공보부, 공산주의 노동자 생활, 1968(1968.5.18. 발행) PP.20-21
- 9 ) Feuer, op.cit., P.20
- 10 ) Ibid.
- 11 ) Ibid., Eastman, op. cit., PP.334-5
- 12 ) I.V. Stalin, Foundations of Leninism, 1924, Chap.8
- 13 ) Sharikov, Kritika i samokritika, 1950, Jurnal

Voprosi Philosophii No.1, 3a, 1950, god, str. 37,  
40 松下輝雄 논문「 소비에트·데모크라시의 특질」( 소비  
에트制 研究 계재논문, 東京 勁草書房, 1956 ) 129 면

- 註 14 ) Gazeta, Prauda, 1935, (8월 2 일 )
- 15 ) 内外問題研究所 発行 「北韓, 그 全貌」( 内外文庫 제  
25 권 ), 1966, 186 면
- 16 ) 上계서, 188 면
- 17 ) 今中次麿著 政党發生論 ( 東京 岩波書店 ), 1936, 70 면
- 18 ) 矢部貞治著 政治学 ( 東京 勁草書房 ) 42 版, 1966, 36 면,  
37 면
- 19 ) D.W.Brogan, Foreword in the "Political parties"  
by M.Duverger ( London, Methuen & Co.LTD ),  
1954.P.8
- 20 ) AP 합동통신, 1958.8.12
- 21 ) Alfrey G.Meyer, What you should know about com  
-munism, 1949, P.47
- 22 )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P.267
- 23 ) 章内炎著 許宇成訳 共產治下の中國 1948 ( 서울 公報社  
발행 ) 참조
- 24 )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1957), in Moder  
-n Political Thought, 1960, by W. Ebenstein,  
P.476
- 25 ) Ibid., PP.483 - 4
- 26 ) Robert G.Neumann, European and Comparative Gov  
-ernment, 1960, P,543

- 註 27 ) Ibid., P.544
- 28 ) 韓國反共聯盟 編著 共產主義理論과 實際 (金斗憲 박사 외 11인 공동 집필), 1968, P.236
- 29 ) William Ebenstein, Today's Isms (Prentice-Hall, Inc. Engelwood Cliffs, N.J.) 2nd ed., 1959, P.4
- 30 ) Karl Marx,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50;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1871 참조
- 31 ) Friedrich Engels, Die Entwicklung des Sozialismus von der Utopie zur Wissenschaft 1880 참조
- 32 ) V. I. Lenin, Selected Works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Moscow, 1947) P.728
- 33 )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1917, Preface
- 34 ) Lenin, Selected Works, PP.731-3
- 35 ) Comintern 제 6 회 반전 결의
- 36 ) Stalin, Speech Delivered at the Red Army Parade on the Red Square Moscow, Nov. 7, 1941; Lenin. Selected Works, vol 1, (op.cit.), P.53
- 37 ) Stalin, O velikoi otietsastviennoi voinie sovietskogo soiuza, 1946 참조 (祖國戰爭에 대하여)
- 38 ) 神川彦松著 世界大戰原因論 (東京 岩波書店), 1940, 122-3면
- 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정당론, 1966, 97면
- 40 ) 韓國反共聯盟 編著 전제시. 105면

# 우리의 지표와 자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I. 후진국의 민주주의 문제

민주정치를 연구한 학도는 민주정치의 성장이 얼마나 점차적인 「코오스」를 밟아 왔는가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완전 무결한 정치체도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아무리 정치체도가 크게 변혁되어도 순전한 과두정치가 갑자기 민주정치로 변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치지식에 관한 한, 민주정치는 전복될 수 있다. 「구메타」의 순간 민주정치는 전복될 수 있다. 역사상 대서특필된 혁명은 돌발적인 민주정치의 창설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두정치의 돌연적인 전복을 의미한다.

민주정치가 달성될 때까지에는 수많은 시련과 충동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 민주정치의 영속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정치풍토가 그것을 받아 들일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민주정치는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그 실험도 유산으로 그친 경우가 있었고 성공으로 끝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대체로 부분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후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민주정치라는 옷이 우리 나라 민중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을 강제로 입히려고 할 때에는 부작용이 따라 왔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조건의 불비에 기인했다. 구미식 민주정치는 성격상 아시아의 풍토에는 그대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배올로기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의 형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아 여러 국민이나 우리 국민은 느끼고 있다.

한편 우리는 우리 나라에 알맞는 정치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때때로 실천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정치들 연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민주주의란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고 문맹이 많고 무교복자가 많고 국가의 공동이익을 자각하지 못하고 빈곤을 타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의 실행될 수 있다.』

이 결론에 따라 위정자와 지식층은 문맹타파와 정치의식 양양과 빈곤극복에 그 동안 열의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히 문맹 타파 면에서는 크게 성공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국 다음으로 문맹이 없는 나라로 발전했다.

민주 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식별있는 선택을 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양양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로서 경제개발면에서 우리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산물임에 틀림 없다. 그러면 그러한 민주주의가 25년 동안 우리 나라 정치풍토에 어느 정도 뿌리 박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적으나마 민주주의 토착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보다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지배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왔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는 민주주의의 토양이 없었던가?

우리 나라의 역사에 민주주의 이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제주의 이조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사상은 김시습선생의 「애민의」이라든가 이율곡선생의 「인심천심론」이라든가 또는 정다산선생의 「토지균등분배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실학청신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동학란에서의 민중 요구라든가 갑오경장에서의 요구 등은 민중의 생활권, 더 나아가서는 자유와 직결되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민주주의와 서로 통하는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봉건적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항거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우리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서 그 억압과 그 구속 아래 항일투사와 지각 있는 지식인이 새로운 민주주의 사조를 흡수하였다. 물론 민주주의 사조는 국민간에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8. 15 해방후 가치체계의 전조와 외래사도의 유입 등으로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제래석의 유교사상, 불교사상, 권위주의 사상과 외래석의 각종 민주주의사상이 혼합되어 일종의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빚어 내었고 지식인도 서계의 추 모양으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6. 25의 공산 남침을 계기로 공산주의의 정체를 눈으로 보게 되자 민주주의 진가를 새삼스러이 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장점을 토착화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침략적 도전적 이데올로기에 직면해서 능가할  
거점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에 있다고 확신하므로 우리 정치 풍토  
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후진국 공통적  
인 고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무엇인가?

### ① 민주주의의 토착화

외부로부터 강요 당한 민주주의가 그 나라 사회구조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②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극복

신생국가는 거의 모두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공산당)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공산주  
의자들은 전체주의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허약한 민주신  
생국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 의 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과대 선전과 민주주의 파  
괴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 그 파괴 행위를 보고도 속수무  
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 본논문의 제2부 공산주의 정치이론비  
판은 그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철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에 관련되어  
있으니 만큼 우리의 반공이론도 민주주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론구성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이론은 실천과 상호

관계에 있는 과학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 ③ 빈곤타과의 문제

신생국가는 거의 다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빈곤하다. 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업화를 촉진하고 경제계획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훈련을 통하여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내자조달 외자도입을 통하여 생산자금 건설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경제 계획의 결실로서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승공에의 길은 단순한 빈곤타과에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 국민소득을 더욱 더 높혀 중진대열에 서도록 알찬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후진국의 공통적 고민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파행적인 개발도상국가로 정지될 가망이 없다. 여기에 주도적 입장에 있는 정부의 과학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요망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맹이 특히 많고 정치가 미숙한 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반대당의 신속한 비판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수립된 계획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반대당이 국민의 동조를 얻어서 비합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민주 정부를 분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정치미숙의 문맹국에서는 반대당에 완전 자유를 허용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문맹도 적고 정치 훈련도 많이 받았으므로 그러한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만일에 탄압 정책을 감행하여 반대당을 봉쇄해 버리게 된다면 정당은 정치적 책임에 불감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맹국인 후진국에서 쓰는 수법은 적어도 우리 나라에는 적당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튼튼한 지방조직을 가진 실력있는 여야당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후진국의 정당정치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건전한 반대당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불평과 실망은 필연적이다. 그 불만은 일정한 한계선을 넘어서면 과격주의로 돌입하여 파시즘으로 빠지거나 공산주의의 온상으로 화하게 된다. 허약한 후진국이 이러한 과격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력있는 건전 정당이 절대 요청된다.

참으로 실력있는 여야당의 존재는 의회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후진국은 오랫동안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 있다가 새로 독립된 나라이므로 외래적인 것에 대하여 조건반사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선진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맞는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 않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꼭 도입하여야 한다는 식이 하나의 유행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합리적 제도나 능률적 제도를 도입하여 토착화하는데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근대성 근대성, 민주적 대중사회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선진국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공식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 II. 한국의 지표

### 1. 정치적 지표

첫째로, 완전한 정치적 주권의 획득은 우리의 지표다. 정치적 주권의 획득은 실로 근대화할 위한 국가 발전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으나 경제적 독립은 아직 의문시 되고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정치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공산 치하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경제를 확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할 때까지 우리의 주권획득에 전념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둘째의 지표는 정치적 안정 유지에 있다. 왜냐하면 경제의 발전이나 행정의 안정은 정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분위기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은 가져오게 한다면, 특혜현상 부패현상 재정불안정현상 사회 긴장현상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하여 「꾸데따」

의 연속을 막아야 한다.

세계의 지표는 경쟁적 정치체계의 존재에 있다. 즉 정치의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경쟁적 정치체계의 존재는 정치적 민주화의 지표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정치적 경쟁성은 민주정치 of 핵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권위주의적인데 반하여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체제는 경쟁적이다. 전진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도 경쟁적 정치체제는 바람직하다. 이것은 양당제도의 확립방향으로 인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계의 지표는 민주주의 정치체도의 확립에 있다. 민주정치 of 핵심적 요소인 국민의 참정과정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의 확립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정치의식 양양이나 명량한 정치 분위기의 조성이 대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정상적 운영이라 하겠다.

국회부재라는 현상은 대의정치 of 의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경향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은 복수정당의 존재만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국민의 도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기능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구성면에서 볼 때 정당은 계급적 정당을 탈피하여 국민적 정당으로 승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의 지표는 행정의 과학화와 능률화에 있다. 현대 대중 국가의 행정부의 기능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현대 대중국가에서는 행정관리의 전문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행정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을 비롯하여 교통 통신 교육 경제 금융 국토개발 보건 노동 부문에 있어서 인간이 생각해 낸 최대 규모의 조직적인 활동과 협력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정치지표로서 정치의 과학화와 더불어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인력과 물자와 경비를 최소한도로 절약함으로써 주어져 있는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데 있다. 행정에 있어서 능률을 수단가치라 본다면 민주주의는 목적가치라 할 수 있다.

여섯째로 우리 나라의 궁극적 정치지표는 복지국가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에서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간의 생활을 사회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혜로서 생각해내 최선의 것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복지국가의 국가관은 첫째로 자유방임을 부정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지도에 의한 복지 증진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적극적국가의 주장이다.

둘째로 그것은 국가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의 국가관을 배척하고 국가와 개인은 사회를 모개로 해서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는 국가관이다.

## 2. 경제적 지표

우리 나라가 먼저 탈피해야 할 것은 후진국가로서의 속성을 벗어나는 일이다. 경제발전의 척도를 국민소득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을 적어도 450 \$ 이상으로 올리는데 당면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밖의 척도로서는 자본의 존재량이라든가 자본의 개발상황이라든가 또는 공업화의 수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경제사회구조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하루 속히 이질적 2중구조 내지 3중구조를 탈락하여 동질적인 일원사회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60%가 넘는 농업인구의 비율도 50% 이하로 낮추도록 산업인구 구성 비율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소득, 낮은 저축, 낮은 투자에서 오는 악순환적인 낮은 생산력과 과잉 인구, 낮은 기술 수준, 천연자원의 비약 및 농업의 정체성은 모두 우리 나라 국민경제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왔다. 우리 나라 경제는 근대화 진로를 위해 애로요인과 후진요인을 제거 내지 개선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의 경제적 지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있다. 물론 고도성장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족산업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근대화의 과정을 밟아 가면서 고도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요청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양적인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알찬 성장을 위하여 경제 내재적인 질의 개선이 요망된다.

고도성장을 유도한 여러 가지 요인에는 외자도입의 촉진, 수출의 증대, 무역외수취의 증대, 투자의 증가, 국내저축의 증가, 외환의 안정, 풍부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질적 요인이 있다.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플란트』의 건설이나 원자재의 사용에 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국산물로 대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자도입 대상사업은 멋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 수입대체, 수출촉진 등 국민의 공동 이익과 결부시켜서 정해야 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 외화가득률의 향상과 국제경제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요망된다. 물가의 추세도 기업의 요소비용을 안정시키게끔 구조면에서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합리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유효수요의 증가와 공급력의 증가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효수요의 증가가 공급력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경쟁성장의 「갭」이 생기게 되어 결국 불경기를 가져오게 된다.

그와 반대로 공급력의 증가가 유효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인플레이

이선 ]을 유발하게 된다.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수요의 증대와 국내수요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중 국내수요의 증대를 위해서 농가소득의 향상이 필요하다. 농가소득의 향상이라는 문제는 유효수요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공급 및 2중경제의 해제문제와도 관련된다.

세계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건전한 국제수지의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수지가 불안정하고 외환보유능력이 빈약할 때에는 경제 수축을 가져오고 결국 불황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수출의 증대, 경제내재의 체질 개선, 사치성 소비재의 억제 등이 요망되고 있다.

세계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경제 각 부분의 수급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 각 부분의 수급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성장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부족, 산업용수의 부족, 기술자의 부족, 숙련공의 부족, 기호식료품의 초과 수요 등에 대해서 크게 배려되어야 한다.

둘째의 경제적 지표는 농업의 근대화이다.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농업의 근대화, 농촌의 근대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과연 농촌의 근대화 없이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래 농촌문제는 농민 농업 농촌의 3자에 관한 문제이므로 농민의 사회의식 양양, 농업의 과학화, 농촌의 구조 개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의 사회의식은 생활의식, 경제의식, 정치의식으로 조성되므로 근대화를 위한 사회의식의 개조는 곧 생활의식·경제의식·정치의

식 등의 개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민의 반봉건적인 정체성을 일소하여야 한다.

농촌의 생활양식 생활조직에는 보수적인 정체성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한편 농촌의 경제 의식면에서 볼 때 토지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일종의 계급적 의식이 있고,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하나의 지역적 의식이 있다. 이러한 의식은 근대화를 위한 국민화 운동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농촌에 요청되고 있는 것은 농촌이 물질 양면에 걸쳐서 자치능력을 갖추는 단위로 개조되는데 있다. 자주적인 정치 의식 민주적인 정치의식을 갖도록 농촌이 개조되지 않는다면, 이기주의, 족벌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 정실주의 등의 누습(陋習)은 타파될 수 없을 것이다.

### 3. 사회적 지표와 문화적 지표

우리 나라가 사회생활면에서나 문화생활면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근대화에 직결되지 않는 비합리적 생활양식의 청산이며 민주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인간불신의 일소라 하겠다. 문화창조면에서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더불어 서구문화의 비판적 흡수가 요청되고 있다.

#### 첫째, 생활의 합리화

우리는 낡은 유습과 사회생활이 비합리성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가족제도가 점차 소가족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비합리성이 자츨 제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 중흥의 이 때에 온갖 비합리적인 생활양식, 허례 허식에 의한 낭비, 대가족주의적인 의존주의 의타주의, 수입보다 너무나 많은 지출, 지나친 사치생활, 착실한 노력의 성과보다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생활 태도, 성실성 없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의 자세 등은 청소되어야 한다.

혈연주의나 지연주의나 또는 학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제 등용방식이나 실력보다도 정실이 앞서고 능력보다도 충성심이 앞서는 판단 방식은 모두 비합리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 사회적 신념체계의 일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전진을 위해 불행하다. 올바른 민족주의 이념, 올바른 민주주의의 이념에 관하여 국민들 간에 개괄적인 일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본질상 국민간의 의견 일치가 크게 요망된다. 후진국의 통폐로서 그러한 의견의 일치가 결여되어 있다면, 국민 「에너지」의 낭비는 필연적일 것이다.

#### 둘째, 불신사회의 제거

인간의 불신은 전제정치나 독재정치와 결부되는 법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불신의 사조는 필경 그러한 비민주정치에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수준의 인간을 전체로 하면서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인간사회를 실현해 보자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인간의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없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사회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로 되어야 한다. 불안의 연속선은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마음의 안정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게 된다.

다음에는 국민의 정치참여의식과 공공심이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의 효과는 지나친 보수주의의 기반과 권위주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정치의식 양양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관용과 타협의 정신은 정치의 민주화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국민의 정신자세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관용, 편견, 편협, 지나친 지배욕, 파벌주의, 맹목적 당파주의 등은 민주 국민이 위해서는 아니 되는 마음의 자세라 하겠다. 흑백의 논리도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거 되어야 하겠다. 관용과 타협은 비겁한 영합주의 기회주의 내지 공리주의와도 다르다.

#### 세계, 창조의식의 양양

명실상부한 독립을 행취하고 유지하려면 우리 국민은 먼저 패배의식 좌절감을 버리고 사대주의 근성 내지 노예근성을 버리고 불식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의 소유자라야 하겠다. 여기에 국민의 자치능력 배양이 크게 요청된다.

문맹퇴치의 성과로 우리 국민은 오늘날 문맹퇴치 단계를 벗어나 구미문화의 번역 모방 단계를 거쳐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 문화 창조 단계에 들어서야 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구미문화의 번역 사업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국민도 번역 문화 흡수에 열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모방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창조 단계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태도나, 저력의 배양 없이 비약만을 노리는 태도를 자립을 바라는 국민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단계는 오히려 구미문화를 충실하게 흡수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미문화의 번역에만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나라 문화풍토에 알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구미문화를 비판적으로 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창조의 길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 국민의 바위에 맞는 알뜰한 우리의 문화 창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단일민족인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확고한 가치관의 확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지식층은 구미문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아,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함이 없이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분에 맞지 않는 출세주의와 치사할 정도의 배금주의로 타락하는 경향을 가끔 볼때,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지나친 향락위주의 경향도 결코 방관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민족 중흥을 기약하는 이때 젊은 지식층은 모름지기 자아와 민족을 똑바로 인식하고 조국을 우려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